

민영화와 노사관계

김 우 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
발 간 사

이 연구가 시작된 '96년도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공기업의 민영화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무성하였다. 특히 공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가스공사가 일차적인 민영화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의 민영화는 '96년내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학자들은 공공성의 유지, 고용불안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있었던 민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논의는 어떠한 증거에 의거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나 민간부문은 경쟁의 논리로 민영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노동계에서는 공공성이나 고용불안 더 나아가 삶의 질의 논리로 민영화에 대하여 대응해 왔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민영화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거하지 않고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채워주는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외국의 민영화 사례나 한국의 민영화 사례, 또한 이러한 민영화가 사례가 보여 주는 효율성 증대(감소)효과, 고용 감소(증대)효과는 지금까지의 민영화에 대한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은 민영화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민영화는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는 명제에 대하여 무조건 수긍하고 어떻게 하면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고용감소를 줄일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 앞으로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민영화 기

업의 선정 자체부터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근로자의 참여가 배제된 민영화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민영화의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점점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공기업의 민영화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이러한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무기를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동부화학, 한국비료, 대한중석의 사례연구는 민영화의 효율성, 고용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으며 민영화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의 노동조합간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두차례에 거친 토론을 통하여 좀 더 개선되었다. 이 토론에 참여하신 노동연구원의 강수돌박사, 전국담배인삼공사노동조합의 이수영국장, 숙명여대의 김장호교수, 어수봉원장, 김상호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식구들에 감사한다. 특히 이 논문에 사용된 상당량의 자료를 수집, 분류, 분석한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인 김준영연구조교에게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김우영박사에게 감사한다. 민영화와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본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의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견해이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6년 12월

한 국 노 동 조 합 총 연 맹
위 원 장 박 인 상



연구결과의 요약

민영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소득분배라는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 또한 효율을 단기적 효율(static efficiency)과 장기적 효율(dynamic efficiency)로 구분하여 볼 때 단기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민영화가 과연 장기적으로도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글에서는 민영화를 단지 단기적 효율에만 의지하지 않고 형평성, 장기적 효율성 그리고 고용과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민영화의 문제는 민영화의 경험을 분석한 후에 더욱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 프랑스의 민영화 경험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민영화 경험도 분석한다.

이 논문의 주요 결과 및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1) 이 논문에서 사용된 대우패널자료에 의거하면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의 소득분포가 민간부문의 소득분포보다 더 형평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민영화는 사회전체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정책입안자는 민영화시 이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민영화의 핵심은 정부정책 혹은 정치상황의 변동으로부터 기업을 차단시키는 것이므로 기업의 소유권은 그대로 정부가 갖고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방식은 민영화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Willig 1993).
- 3) 민영화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의혹을 없애고 민영화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과정은 투명하여야 하며 또한 공정해야 한다.

- 4) 영국과 프랑스의 민영화 경험에서 배울 점은 ① 민영화 추진의 일관성 ② 시장의 경쟁성 확보 ③ 경영자나 근로자의 참여 ④ 민영화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⑤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이다.
- 5) 일반적으로 민영화가 공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인식되는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민영화가 반드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① 시장의 경쟁성 확보 실패 ② 정책의 비일관성 ③ 공기업 인수자의 경영능력 미비 ④ 민영화 후 지속적인 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 6) 영국과 프랑스의 경험에서 보듯이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이러한 경쟁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쟁성이 확보될 때까지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하여 계속 규제하여야 한다.
- 7) 민영화는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일반적 견해 또한 이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다.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는 고용감소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반드시 경영합리화차원에서 발생하는 과잉노동의 해소라고는 볼 수 없다. 즉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을 하여 필요 이상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영화 후에는 이러한 과잉노동이 제거될 것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이 연구에서는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① 경쟁적 시장으로부터 오는 경영합리화의 압력 ② 이러한 합리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인수회사의 경영능력 ③ 높은 자본-노동의 대체성 ④ 고용대체적 기술혁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 8) 사례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민영화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민영화 후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고용불안을 야기시켜 결국 효율성도 증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9)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을 좀 더 엄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의 경영자가 재정능력만 있고 그 부문에서 경영능력이 없을 경우는 민영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

< 目 次 >

第1章 序論	1
第2章 民營化의 理論的 接近方法	6
1. 효율성	7
2. 형평성	12
3. 단기적 효율과 장기적 효율	17
4. 민영화의 정치학	18
第3章 外國의 民營化 經驗	21
1. 영국의 민영화	21
2. 프랑스의 민영화	24
3. 민영화가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26
第4章 韓國의 民營化	31
1. 한국의 민영화 추진 현황	32
2. 민영화의 경험 분석	36
가. 기존 연구의 소개	36
나. 민영화의 효율성 증대효과 분석	39
다. 민영화의 고용효과 분석	47
第5章 事例研究	58
1. 동부화학	58
2. 한국비료 (삼성정밀화학)	63

3. 대한중석	67
第6章 結論	73
부 록	78
- 민영화에 관한 ILO와 EEC의 기준	
- 민영화 효과분석의 대상기업 및 회사연혁	
- 정부의 주식소유 현황 및 민영화 비율	
참고문헌	117

< 表 目 次 >

<표 1> 민간 대 공공부문의 로그임금평균 및 분산	14
<표 2> 영국의 주요 공기업 민영화상황 (1979~93)	2
<표 3> 프랑스의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상황	25
<표 4> 유럽 주요 국가들의 민영화규모	25
<표 5> 영국의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고용상황	27
<표 6> 민영화 추진 실적 (1996년 3월 현재)	34
<표 7> 민영화가 생산비용에 미친 영향	37
<표 8> 민영화가 1인당 생산성에 미친 영향	38
<표 9> 민영화가 1인당 매출액에 미친 효과	40
<표 10> 1인당 매출액 함수의 추정치	43
<표 11> 기업별 1인당 매출액 함수의 추정치	44
<표 12> 민영화가 1인당 매출액에 미친 영향(요약)	45
<표 13> 시장점유율	46
<표 14> 민영화가 종업원수에 미친 효과	49
<표 15> 고용 현황 (총인원)	50
<표 16> 노동수요함수의 추정치	52
<표 17> 기업별 노동수요함수의 추정치 (자본통제)	53
<표 18> 기업별 노동수요함수의 추정치 (자본비용통제)	54
<표 19> 민영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요약)	55
<표 20> 기계장비율	57
<표 21> 사례연구 요약	71

< 附錄表 目次 >

<부록 표 1>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생산성	109
<부록 표 2> 총 자본 추이	110
<부록 표 3> 1인당 인건비	110
<부록 표 4> 자본비용	111
<부록 표 5> 종업원 현황	111

第 1 章

序 論

세계경제가 소위 무한경쟁(unlimited competition)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반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자원부족국이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경쟁의 가속화 현상은 한편으로는 시장기회(market opportunities)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커다란 짐이 되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심화의 다른 측면에는 규제완화(de-regulation)라는 거대한 세계적 물결이 흐르고 있다.¹⁾ 규제완화는 제품시장이나 생산요소(자본, 노동)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 혹은 완화하는 것에서부터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sation)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의 규제완화는 시장(market)의 순기능을 최대 발휘하여 경제의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구체적으로 민영화만 본다면, 1980년 이후로 80개국 이상이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6,800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 (Kikeri, Nellis, and Shirley 1992). 이들 국가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동구 유럽국가들, 러시아, 중국 및 선진 공업국들을 포함한다.

규제완화의 형태 중 가장 논란이 많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민영화라고 보여진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민영화과정에서 우려되는 대량실업, 민영화된 기업의 공공성 유지 등이 민영화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민영화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강화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민영화를 찬성하는 쪽은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반대하는 쪽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형평성(equity)을 주장한다.

민영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경제·경영학 부문에서 이루어져 왔고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민영화로 인해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 같다.²⁾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소득분배라는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 또한 효율을 단기적 효율(static efficiency)과 장기적 효율(dynamic efficiency)³⁾로 구분하여 볼 때 단기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민영화가 과연 장기적으로도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영화를 단지 단기적 효율에만 의지하지 않고 형평성 및 장기적 효율성과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공공정책의 현실세계에서 분배의 논리가 시장결과의 성·패를 판단하는데 있어 효율의 논리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 (In the real world of public policy . . . distributional issues are usually more influential than efficiency ones in shaping judgements about the success or shortcomings of market outcomes.)”는 Wolf(1994)의 말에 주의하며 우리는 민영화 문제를 접근할 것이다.

민영화는 대량감원을 유발한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노동조합은 민영화를 반대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민영화로 인한 대량감원은 경험하고 있지 않지만⁴⁾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2) 최근의 연구로 Willig(1993)와 Boycko, Shleifer and Vishny(1996)가 있다.

3) 교육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결정일 수 있다. 장기적 효율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Schumpeter(1934)이다.

이미 민영화 과정에서 일부 이러한 경험을 거쳤고 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대량감원은 대량실업을 발생시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또는 실업보험의 도입 및 확대는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⁵⁾

우리 나라와 같이 실 근로시간이 주 48시간 이상 되고 실업보험이나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대량실업을 유발할 수 있는 민영화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더욱 더 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며 또한 산업구조의 재조정을 야기시켜 사회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민영화의 이익(benefits)은 자본가가 갖고 비용(costs)은 노동자가 부담한다는 인식도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독점적 공기업을 여러 기업에게 나누어 팔아 경쟁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이익을 본다는 것 또한 이론적 주장일 뿐 현실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지난 84년 영국에서는 승객에 대한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국영 버스회사를 70개의 민간기업으로 분할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대형 버스회사 6개가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버스요금도 인하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영화 전보다 증가했다는 것이 얼마전 보도되었다.⁶⁾ 이같이 민영화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만병통치약(panacea)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설령 민영화가 요청된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실행하는가 하는 문제 또

4) 민영화로 인한 감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8년에 동부화학이 공기업이었던 영남화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남화학의 근로자 약 200명의 해고가 있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있었던 민영화로 인한 해고경험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해고는 그 빈도나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다.

5)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작업공유(worksharing) 혹은 초과고용(featherbedding)으로 나타난다. 준 고정비용(quasi-fixed costs) 때문에 한 사람이 10시간을 일하는 것과 두 사람이 각각 5시간을 일하는 것은 후자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일 수 있는 것이다.

6) 이 내용은 중앙일보 1996년 6월 20일자 신문에 보도된 “영 버스민영화 부작용”이라는 기사를 요약한 것임.

한 쉽지 않다. 민영화의 방법으로는 공공경매(public offering), 직접판매(trade sales), 경영자 혹은 노동자에 의한 매입(management or employee buyouts), 일반 혹은 근로자에게 주식을 무상 혹은 적정가격으로 제공(allocation of shares to the public or employees free of charge or at a preferential price), 부채/자산 교환(debt/equity swaps), 회사청산 및 자산판매(liquidation of the public enterprise and sales of its assets)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나라의 사정에 맞게 특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 또한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이다.⁷⁾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재벌의 참여가 두드러지자 우리 나라 정부가 '94년에 자본금 200억원 이하인 1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30대 재벌의 입찰참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민영화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⁸⁾

이 글은 민영화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하고 이들 토대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대로 민영화를 단순히 경제의 효율성으로만 따지는 것은 너무 평면적인 사고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형평성, 공공성 및 장기성 등도 민영화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시킬 것이다.

또한, 민영화의 문제는 민영화의 경험을 분석한 후에 더욱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 프랑스의 민영화 경험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민영화 경험도 분석하고자 한다. 민영화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측면은 민영화로 인한 고용불안이고 이것은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사안중의 하나이며 노동조합이 민영화에 소극적이게 되는 하나의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민영화를 이론적으로 접근하

7) 여기 열거된 민영화의 방법은 Nestor and Nigon(1996)을 참조한 것임.

8)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10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국정교과서, 부국신용금고, 한성신용금고, 기은전산, 공영기업, 고속도로시설공단, 전화번호부, 담배자판기, 한국신화, PC통신 등임 (송대회 1994).

는데 여기서는 효율성, 형평성, 장기적 효율성, 민영화의 정치적 측면 등을 다룬다. 제3장은 외국의 민영화 경험을 소개하며 여기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민영화 경험을 소개하고 이들 국가에서 민영화가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민영화 경험을 효율성과 고용측면에서 각각 분석하는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요약하고 1993년 민영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가 진행되어온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제5장은 사례연구로서 1994년에 완전 민영화된 3개회사의 노조간부와 인터뷰(interview)내용을 소개한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민영화 전·후의 노사관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민영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재평가하며 앞으로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한다.

第 2 章

民營化의 理論的 接近方法

민영화는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설명하기에 앞서 왜 정부가 기업의 소유 혹은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정부가 시장(market)에 참여하는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형태는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공급의 법칙(Say's Law)이 지배하던 19세기말, 20세기초의 시기를 지나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수요의 부족을 절감하였고 정부는 케인즈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을 기초로 하여 직접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수요창출을 유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의 역할이 치안유지와 같은 경찰국가의 범위를 넘어 시장(market)을 운영하는 한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두번째 형태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의 외부성(externalities), 공공재(public goods), 한계비용의 감소로 인한 이익증가(increasing returns), 시장의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 등의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게 되는 이

유인 것이다. 도로, 다리, 항만의 건설, 전력, 수도, 통신사업의 국유화 등이 부류에 속한다. 또한, 우리 나라나 일본이 정부주도하에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효율성 원칙보다는 형평성 원칙에서 이루어진다. 수도나 전기사업을 공기업화함으로써 외딴섬에까지도 이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한 단면이라 하겠다.⁹⁾ 또한,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영화의 논리는 위에 열거한 정부의 순기능보다는 정부의 악기능이 더 많으며 또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인한 손실보다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or nonmarket failure)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민영화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효율성(Efficiency)

민영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효율성이다.¹⁰⁾ 복지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2가지 명제는 첫째,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점(equilibrium)은 파레토 효율적(Pareto-efficient)이며 둘째, 이러한 시장결과는 세금(tax)이나 증여(transfer)를 통하여 보다 형

9) Wolf(1994)에 따르면 시장결과(market outcomes)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면 이것도 시장실패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외딴섬에 사는 사람에게 수지(cost-benefit)상의 이유로 수도나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도 시장실패라고 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 이를 시장실패라고 구분하지 않고 경제의 형평성·공공성이라는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10) 물론, 민영화의 목적은 효율성 증대 외에 정부재정자원의 조달, 국민의 경제참여 증대, 민간시장의 활성화, 작은 정부 지향 등이 있으나 이러한 목적들도 결국에는 경제의 효율성 증대라는 큰 명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

평정이 높은 균형점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이 두 명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 온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이나 증여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경제학의 2가지 명제를 쉽게 풀이하면 우선 경제는 경제구성원 개개가 이기적으로 활동하도록 보장하여 파이(pie)를 크게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 불평등은 세금이나 증여로 사후에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시장관여는 소극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즉, 경제활동의 주체는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소비자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이 되어야지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게 된다고 본다. 이를 신봉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동구 공산국가의 붕괴, 소련의 붕괴를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예들로 제시한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복지경제학의 2가지 명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완전경쟁의 가정, 국가가 개인들의 선호도(preferences)를 안다는 가정 등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에서 오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느낀다.

민영화와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효율성의 논리는 적용된다. 공기업이 가지는 공공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변화, 정치구조 변화, 이해단체들의 로비활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고유의 활동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비난한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십중팔구 대량감원이 따르는데 이것이 바로 공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¹²⁾

11) 이 두가지는 각각 복지경제학의 첫번째, 두번째 명제들이다. 첫번째 명제는 Adam Smith(Wealth of Nations, 1776)에 기원을 둔 것으로 “모든 경제 구성원이 이기주의적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완전경쟁하의 균형점은 파레토 효율적(Pareto-efficient)이다”라고 서술하며 두번째 명제는 “모든 경제 구성원이 이기주의적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파레토 효율적인 균형점에서 다른 파레토 효율적인 균형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세금 및 증여와 가격이 존재한다”라고 서술한다. 자세한 내용은 Feldman(1988)을 참조할 것.

12)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경험적 연구로는 Donahue (1989), Mueller (1989), Vining and Boardman (1992) 등이 있다.

공기업이 비능률적이라면 소유권의 이전 없이도 전문경영인을 공기업의 경영자로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일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성구(1996)는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한국통신과 같은 공공기업들이 정부의 독단적인 규제와 반민주적인 경영에 의해 관료화와 타성, 경직성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불가피하게 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공기업의 비판하는 논거가 되는 것인데 이는 사적 경제로 위임함으로써가 아니라 기업내부의 생산자들과 기업외부의 민주적인 세력들에 의해 기업경영을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만 해결되어야 한다. 생산자들의 민주적 경영참가와 인사관리, 국가의 개입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의 확보가 공기업의 생산성 증대의 관건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같이 보이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최한 민영화에 대한 토론회에서 Willig(1993)는 “정부가 왜 전문경영자를 공기업에 고용하여 민간기업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그러한 형태의 공공부문의 개혁은 실효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아래의 Robinson(1992)의 글을 인용하여 답변하고 있다 :

“훌륭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 . . 공기업과 정부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증명됐다. 정부는 공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기업들은 가격이나 투자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권한을 거의 갖기 못했다. (Despite good intentions . . . it proved impossible to have “arm's length” relationships between the nationalized corporations and government. Instead, governments of both major parties found irresistible the temptation to interfere with the

decisions of state-owned industries so that, in practice, the corporations had little control over pricing and investment decisions.)”

또한 Willig(1993)는 브라질 정부가 한 때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이러한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공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공기업이 경영혁신을 통하여 정부의 간섭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Hemming and Mansoor(1988)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공기업은 왜 민간기업보다 비효율적인가에 대하여 한번쯤은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공기업 경영자의 목표는 민간기업 경영자의 목표와 다르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공기업의 경영자는 정부관리이거나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¹³⁾ 이들은 기업의 이윤극대화라는 목표 외에도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공기업 사장을 거쳐 더 좋은 공기업 사장으로 가려고 한다든지 혹은 명성을 얻어 정계에 입문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기업의 이윤극대화의 추가적인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경영자들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경영합리화보다는 어떻게 하면 임기를 문제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혁신에 인색하고 연공서열식의 경영을 하는 것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의 사업이 대다수 국민의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는 이를 민영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시 말하면 민간기업의 경

13) 우리 나라에서도 비전문경영자를 공기업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빈번하다. 최근의 예로 정부는 지난 6월 21일에 이재욱 전 국회의원을 석유개발공사 이사장에,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을 한국가스공사 이사장에, 이용식 전 변호사를 대한석탄공사 이사장에 황영하 전 총무처 장관을 대한주택공사 이사장에 각각 임명했다.

영자는 공공성(public interests)을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수도·전기사업을 민간기업의 경영자가 운영하게 되면 기업의 적정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¹⁴⁾ Willig(1993)는 이를 이론적 모델을 통해 증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정부의 시장규제(세금이나 증여의 방식)가 일관성이 없을 때나 공공성의 변화가 클 때 즉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변화가 클 때는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이 일관성을 가져야 민간기업이 이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과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공기업의 경영자가 민간기업의 경영자보다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¹⁵⁾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기업의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는 경제학의 기본명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민영화가 무조건적으로 효율성을 높인다고는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성패는 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가, 기업의 시장진출이 얼마나 용이한가, 정부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등에 달려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상품을 생산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데 있어서는 민영화된 기업이 얼마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민영화의 핵심은 정부정책 혹은 정치상황의 변동으로부터 기업을 차단시키는 것이므로 기업의 소유권은 그대로 정부가 갖고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방식은 민영화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14) 이 말을 달리 설명하면 민간기업 경영자의 목적함수가 사회계획자(social planner)의 목적함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공기업의 경영자가 민간기업의 경영자보다 더욱 민감할 것이라는 근거는 공기업 경영자의 정치적 목적에서 기인한다.

2. 형평성(Equity)

형평성의 문제는 복지경제학의 제2명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자신의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므로써 경제의 효율성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결과가 경제·사회적으로 특히 분배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효율성은 사회구조 혹은 주어진 재산(endowment)을 바탕으로 그 위에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기초가 되는 구조자체가 시작부터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 결과가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여도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시장결과(market outcomes)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는 크게 상대성과 절대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상대성의 논리는 공정성(fairness)에 의해 사회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만일 A라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현 상태에 만족하는 반면, B라는 사회의 구성원은 자기의 현 상태에 만족하기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경제력을 시기(envy)한다고 할 때 A라는 사회가 B라는 사회보다 더 좋은 사회라고 평가한다. 절대성에 의한 평가는 Rawls(1971)의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에 의거해 사회를 평가하는 것인데 Rawls(1971)는 만일 A라는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B라는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 살면 A라는 사회가 B라는 사회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¹⁶⁾

이 두가지 원칙은 분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소득을 예로 들면, 사회구성원들의 선호(preferences)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상대성이나 절대성의 논리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소득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대성이나 절대성의 원칙

16) 물론, 바람직한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기서 제시한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단지 이 글의 성격상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했을 뿐이다. 경제적 의미의 공정성(fairness)나 정의성(justice)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Feldman(1988)을 참조할 것.

은 평등주의(egalitarianism)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민영화와 형평성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민간부문의 소득분포가 공공부문의 소득분포보다 넓다면 공기업의 민영화 자체로 사회전체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사이의 소득분포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공공부문의 소득분포가 민간부문의 소득분포보다 좁을 것이라는 것은 공공부문의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이고 또한 임금체계가 정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실증적 검토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경우를 대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분포에 대하여 알아본다. 1994년 대우가구패널데이터 개인화일 중 정규직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소득분포를 보면 <표 1>과 같다.¹⁷⁾

아래 <표 1>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부문의 평균임금이 민간부문의 평균임금보다 높고 둘째, 공공부문의 임금분산이 민간부문의 임금분산보다 작고 셋째,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은 민간부문의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최고임금은 그 반대로 민간부문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공기업/공사만을 따로 떼어 볼 때에도 이러한 패턴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17) 원 자료에 나타난 정규직 봉급생활자는 2,832명이지만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농수산업 종사자, 국제기관 종사자를 빼었고 또한 민간/공공기업의 분류상 기업형태가 불분명한 비영리업체나 기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는 김우영·최영섭(1996)이 사용한 데이터의 서브샘플(sub-sample)이다.

18) 여기서 공공부문의 임금이 민간부문의 임금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평균의 비교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 같은 자격의 근로자가 민간부문에 있을 때보다 공공부문에 있을 때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 대 공공부문의 임금격차에 대한 우리 나라의 연구는 아주 제한적이며 결과도 일정치 않다. 예를 들면, 이종훈(1996)은 공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비슷한 업종의 민간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고 하는 반면에 박영범·이상덕(1990)은 반대로 공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비슷한 업종의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표 1〉 민간 대 공공부문의 로그임금평균 및 분산					
부 문	로그임금 평균	로그임금 분산	로그임금 최저치	로그임금 최고치	표본수
민간부분	8.43	0.23	7.07	10.73	911
공공부분	8.70	0.18	7.44	10.07	155
공기업/공사	8.81	0.21	7.44	9.81	71

주 : 1) 평균, 분산, 최고, 최저치는 대우패널에서 제공되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된 것임..
 2) 임금 = (정액급여 + 고정상여) / 월평균노동시간.
 3) 공공부분 = 정부기관 + 공기업 / 공사.

임금의 형평성 혹은 분배측면(임금의 분산)에서 볼 때 공공부문의 임금분산이 민간부분의 임금분산보다 더 작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민간부분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²⁰⁾ 또한, 공공부분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사람의 임금이 민간부분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사람의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Rawls (1971)의 원칙에 따라 공공부분이 민간부분보다 사회적으로 더 평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공공부분이 사회전체의 임금격차를 축소

19)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분이 민간부분에 비해 산업이나 업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며 따라서 업종, 산업을 통제할 수에 분산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종이나 산업을 통제하기 전의 분산을 비교하는냐 아니면 통제된 후의 분산을 비교하느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만일 공공부분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분산을 보려 한다면 산업이나 업종을 통제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처럼 공공부분이 민간부분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분산의 증감을 보려면 산업이나 업종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 옳다. 즉 공공부분 이 민간부분화하면 공공부분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민간부분에 속한 산업이나 업종으로 전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업종이나 산업을 통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0) 이러한 현상은 임금의 분산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Gini계수를 계산한 결과 민간부분의 Gini계수는 0.2654, 공공부분의 Gini계수는 0.2306으로 민간부분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공공부분의 소득불평등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회 전체의 임금분산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자. 사회전체의 임금분산은 다음과 같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임금분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1)

$$\text{Var}(S) = \beta \text{Var}(P_b) + (1 - \beta) \text{Var}(P_r) + \beta(1 - \beta)[E(P_r) - E(P_b)] \text{----- (1)}$$

위 식에서 $\text{Var}(S)$ 은 사회전체의 임금분산, $\text{Var}(P_b)$ 는 공공부문의 임금분산, $\text{Var}(P_r)$ 은 민간부문의 임금분산, $E(P_r)$ 는 민간부문의 평균임금, $E(P_b)$ 는 공공부문의 평균임금, 마지막으로 β 는 공공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식 (1)을 통하여 우리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사회의 임금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식 (1)을 β 로 미분하면

$$\Delta \text{Var}(S) = [\text{Var}(P_b) - \text{Var}(P_r)] + (1 - 2\beta)[E(P_r) - E(P_b)] \text{----- (2)}$$

<표 1>의 수치를 식 (2)에 대입하면, 공공부문의 임금분산이 민간부문의 임금분산보다 작으므로 $\text{Var}(P_b) - \text{Var}(P_r)$ 는 음수, 공공부문의 비율이 50%보다 작으므로 $(1 - 2\beta)$ 는 양수, 민간부문의 평균임금이 공공부문의 평균임금보다 작으므로 $E(P_r) - E(P_b)$ 는 음수가 각각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전체의 임금분산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전체의 임금분산을 증가시키며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하여 보면 공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percentage point 감소하면 (즉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행 6.5%에서 5.5%로 감소하면) 사회전체의 임금분산은 약 1.7%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이와 유사한 방법은 Freeman(1980)이 노조/비노조부문의 임금분산을 비교하는 연구에서도 사용된다.

둘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회의 특정구성원 (주로 가난한 계층)이 공기업에서 생산되던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이 또한 형평성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의 이런 측면을 일반적으로 공공성(public interests)이라고 표현한다. 민영화된 기업은 수익이나 비용만을 생각할 뿐 공공성은 등한시하게 되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 규제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원래의 민영화의 취지를 변질시키게 된다.

공기업이 맡고 있는 상당 부분은 주로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였을 때에 일부 국민들이 이전에 누릴 수 있었던 기본적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이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는 것이고 이는 공정성(fairness)이나 Rawls(1971)의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로 판단할 때 결코 사회적 개선(social improvement)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노동조합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공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의 공공성을 많이 부각시킨다.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민주성과 형평성을 그 이념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민영화로 인한 실업, 고용불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저하문제를 민영화의 반대 논리로 사용해 왔다. 우리 나라의 공노대(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나 외국의 노동조합연맹들도 공공성의 논리로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우리 나라 정부의 민영화 추진 계획에 대한 공노대의 반대성명 중에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고, 프랑스의 노동자의 힘(Force Ouvriere)이라는 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하여 “모든 시민이 통신, 에너지, 교통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수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²²⁾

22) 이 내용은 1996년 6월 5일 노동자의 힘(Force Ouvriere)이라는 프랑스 노총에서 발간하는 신문내용을 참조하였음.

3. 단기적 효율과 장기적 효율(Static Efficiency vs. Dynamic Efficiency)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효율은 대부분 단기적 효율을 지칭한다. 단기적 효율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 혹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하는 것으로 조직의 다운사이징(downsizing),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 의사전달체계의 신속화, 시간급(time rate)보다는 실적급(piece rate) 등으로 나타난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대부분 이런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반대로 장기적 효율은 생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생산방식의 변경 혹은 개선이나 새로운 제품 혹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시킬 수 있는 신 기술의 개발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단기적 효율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의 효율을 의미하는 반면에 장기적 효율은 그 여건을 변경시키므로써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의미를 갖고있다. 장기적 효율과 관련되는 활동으로는 기간산업에의 투자, 기술개발에의 투자, 문화·교육에의 투자, 환경에의 투자 등이 있으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투자에 대한 수익(returns)이 미래에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효율성을 가진 사업을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기술개발에의 투자는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시장변화에 대한 정보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며 기간산업에의 투자, 문화·교육에의 투자, 환경에의 투자는 정부주도의 공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기업의 수명(life cycle)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투자의 효과가 미래에 나타나는 사업을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추가적으로, 우리 나라나 일본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 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경제기획원이 주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일본의 MITI(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가 주도한 투자정책들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수출확대의 기반조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경제의 장기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²³⁾

이와 같이, 민영화가 기업의 효율을 높인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그 효율이 단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것인지를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은 대체로 근시안적(myopic)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혹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익사업(수도, 가스, 전기 등)을 민영화하는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성격상, 장기적 효율성은 민영화 여부를 판단하는데나 민영화 후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4. 민영화의 정치학(Politics of Privatisation)

민영화의 경제적 논리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근거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민영화는 반드시 이러한 근거로 추진되거나 반대되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민영화가 이해집단(interests groups)간의 힘의 작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Walsh(1995)의 글을 바탕으로 민영화의 정치적 측면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민영화는 한 국가의 지도자(대통령이나 수상)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변한다. 민영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시장(market)의 신봉자이며 정당(political party)면에서 보더라도 이들은 주로 보수당에 속한다. 반대로,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보다는 정부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사회복지에 더욱 관심을 갖으며 주로 노동당이나 민주당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민영화는 경제적 논리보다도 정치적 논리에 더 좌우되며 어떠한 이념을 갖는 정치가가 정권을 잡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23) Johnson(1987)은 신흥 아시아 국가(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들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에서 이들 국가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둘째,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압력을 줄 수 있는 강한 민간부분이 있는 나라에서 쉽게 추진된다 (Walsh, 1995).²⁴⁾ 공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은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시장보다 수요 면에서 안정적이고 경쟁성이 약하므로 민간기업에서는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정부에 민영화의 압력을 넣는 것이다. 임응기(1993)의 연구에서도

“오히려 정권을 가진 집단이나 정부로 보서는 공기업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우선 공기업의 사장이나 이사장 등 높은 자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야 장관 등 고위직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을 앉히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 다시 말하면 정권을 쥔 정치집단이나 관료의 입장에서 볼 때 뚜렷한 외부적 압력없이 정부가 자진해서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고 말하고 있어 민영화를 위한 외부의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셋째, 민영화를 신봉하는 학자, 전문가, 고위공무원들이 그들의 이상(ideology)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영화는 추진될 수 있다. Walsh(1995)에 나타난 예를 보면, 뉴질랜드의 재무성은 Coase(1960), Posner(1974), Buchanan(1969)의 이론과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및 경합이론(theory of contestability)에 의해 움직였으며, 미국의 레이건대통령하의 경영 및 예산 위원회(Office of Management and the Budget), 영국의 대처수상하

24) Walsh(1995)는 이러한 예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예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부분이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예가 있다. 삼성의 이진희회장은 1993년 5월 15일에 있었던 고려대에서의 강연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민영화 등 민간부문 경제활동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일보 1993년 5월 15일). 이진희회장의 이러한 강연은 정부가 민영화방향을 발표하기 몇달전에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민간부문의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의 효율국(Efficiency Unit) 등은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 축소라는 이념아래 움직였다.

이외에도 각종 이해단체간의 힘의 역학이 민영화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3년도 12월 29일에 발표된 “공기업 민영화 및 직능조정방안”은 추진실적이 부진했는데 그 원인중의 하나로 이해단체들간의 갈등이 지적되고 있다 (송대회, 1994).²⁵⁾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민영화는 경제적 논리이외에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며 또한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추진된다. 민영화로 인해 얻는 집단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잃는 집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효율성의 논리만 가지고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회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실행하더라도 반드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더 나아가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해 보상(compensation)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5) 송대회(1994)는 국정교과서의 민영화 추진이 연기되는 이유로 사학재단의 연고권 주장, 제6차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사유, 종업원의 고용불안정 등이라고 지적한다. 이 밖에 민영화를 둘러싼 재벌들간의 이권 다툼도 민영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第 3 章

外國의 民營化 經驗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 이후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동구 유럽국가들, 러시아, 중국 및 선진공업국들을 포함하는 80개국 이상이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6,800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 (Kikeri, Nellis, and Shirley, 1992). 이들 국가들 모두의 경험을 살펴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민영화 추진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²⁶⁾ 또한, 민영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고용불안정과 노사관계의 변화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각 국의 상황도 이 장에서 알아본다.

1. 영국의 민영화²⁷⁾

영국의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대처수상이 집권하기 시작한 1979년부터 시

26) 최근에 발간된 OECD보고서는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의 민영화 경험을 요약하고 있다. 이 장에 소개되는 영국, 프랑스의 민영화 경험 외에도 이 책에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태국, 한국, 브라질의 민영화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27) 이 내용은 1996년 민영화에 대한 OECD보고서에 실린 H.M. Treasure의 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979년과 1993년 사이에 추진된 영국의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상황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영국의 주요 공기업 민영화상황 (1979~93)

민영화 시 기	회 사 명
1984	영국통신(British Telecom)
1986	영국가스(British Gas)
1987	영국공항국(British Airports Authority) 영국항공(British Airways)
1988	영국철강(British Steel)
1989	지방수도국(Regional water authorities, England & Wales)
1990	지방전기회사(Regional electricity companies, England & Wales)
1991	전기발전회사(Electricity generating companies, England & Wales)
1992	스코트랜드전기(Scottish electricity companies)

주 : 위의 내용은 Colling and Ferner(1995)의 Table 16.1에 나타난 것임.

영국정부는 2가지 목표(혹은 원칙)아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첫째는 민영화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efficiency)을 증가시키므로써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가능한 많은 국민이 민영화된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국민주 원칙). 이러한 원칙아래 영국 정부는 가능한 빠른 기간 안에 민영화를 달성하려 하였고 그 추진과정에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 재조정²⁸⁾이나 일련의 규제를 도입하였다. 1984년에 우정국(General Post Office)에서 통신부문을 찢아 영국통신(British Telecom)²⁹⁾으로 매각한 것, 국영버스(National Bus)를 60개의 회사로 나누어 매각한 것, 잉글랜드와 웨일즈이 있

28) 경쟁을 도입하면서 민영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민영화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뉴질랜드항공을 민영화하면서 오스트렐리아항공의 뉴질랜드 입항을 허가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Douglas, 1996).

29) 영국통신(British Telecom)은 최근 미국의 제2통신회사인 MCI통신을 흡수·합병한 것으로 유명하다.

는 전기산업을 민영화 실시 이전에 3개의 회사로 재구성시킨 것, 영국철도의 민영화를 대비하여 철도산업을 재조정 한 것 등은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영국정부가 취한 산업재조정의 예들이다.

만일, 공기업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완전경쟁체제에 있지 못한 때에는 영국정부는 “독립규제(independent regulation)”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하려고 애썼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완전경쟁이 선행조건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³⁰⁾

영국정부는 민영화를 통하여 정부와 기업경영사이의 끈을 끊으려 하였으며 민영화과정에서 종업원이 기업소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① 장기적 종업원 지주제 (예, 영국통신, 가스, 수도, 전기산업) ② 경영자나 종업원에 의한 기업인수 (예, 국영버스) ③ 기타의 종업원에 의한 주식소유제도를 장려하였다.

영국정부는 또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반드시 운영하여야 할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삼았으며, 민영화를 대비하여 경영층을 강화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노동정책을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본시장이 필요하였는데 영국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내자본 뿐 아니라 국외자본에도 의존하였다. 예를 들면, 보험서비스(Insurance Service)는 1991년 12월에 Nederlandshe Credietverzekering Maatschappij NV라는 네덜란드회사에게 팔았다. 일반적으로 특별주(special share)나 황금주(golden share)는 국내, 국외 투자자들을 차별하여 적용되지 않았으며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한 회사의 주식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은 국내 투자자나 국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다만, 국방과 관련되는 Rolls Royce와 BAe의 두 기업에 한하여 외국 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의 상한선을 정하였다.

30)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에 설립된 독립규제기구로는 OFTEL, OFGAS, OFWAT, OFFER가 있다.

2. 프랑스의 민영화³¹⁾

프랑스는 영국보다는 다소 늦게 민영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민영화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 시기는 1986년에서부터 1988년에 거친 시기이고 두번째 시기는 1986년법이 개정된 1993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³²⁾

프랑스의 민영화는 영국의 민영화 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영국보다는 민영화의 절차나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랑스의 1986년, 1993년의 민영화를 규정하는 법들이 정부에게 민영화에 관한 막대한 재량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민영화의 과정은 선명(transparent)해야 하고 공정(equitable)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서도 나타난다. 프랑스의 헌법에서도 독점성을 갖는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어 민영화의 엄격성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매각으로 인해 얻어지는 수입을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또한 수입의 일정부분을 민영화과정에서 발생하는 해고자들이 재 취업하는데 필요한 직업훈련에 사용함으로써 민영화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을 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Durand, 1996).

지금까지 있었던 프랑스의 주요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의 민영화 상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공공기관 이외에도 국유군수회사(State Arsenals), 국립보험기금(Caisse Nationale de Prévoyance), 국립출판(Imprimerie Nationale)이 최근에 민영화되었고, 프랑스통신(France Télécom)도 현재 민영화 고려중이다.

31) 이 내용은 1996년 민영화에 대한 OECD보고서에 실린 Patrice Durand의 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32) 프랑스에서 민영화는 1986년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다 (Pitelis and Clarke, 1993). 하지만 본격적인 민영화는 민영화에 대한 법이 최초로 제정된 1986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민영화에 대한 프랑스의 법은 1986년 7월 2일과 '86년 8월 6일에 제정, '93년 7월 19일에 개정되었다.

<표 3> 프랑스의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상황

민영화 시 기	회 사 명
1987	종합전력(Compagnie Générale d'Électricité)
1987	종합통신(Compagnie Générale des Communications Téléphoniques)
1987	산업개발연구원(Institut de Développement Industriel)
1993	파리국립은행(Banque Nationale de Paris)
1995	Seita(담배제조공사)
1995	Usinor Sacilor(철강회사)
1995	Renault(자동차회사)

주 : 1987~93년의 민영화에 추진 상황은 Durand(1996)의 글에 나타난 사례들을 간추린 것이고 1995년의 민영화 추진 상황은 Country Report(1995)의 프랑스 편을 참조한 것임. Renault(자동차회사)는 1994년말 현재 일부 민영화가 되었고 계속 진행중임.

프랑스의 민영화는 그 규모에 있어서는 영국보다 소규모로 추진되었으나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국가들 보다는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참고로 유럽 국가의 민영화 규모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유럽 주요 국가들의 민영화규모

국 가 명	민영화 기간	민영화 규모 (영국 파운드)	평균 GDP중 비율(%)
영 국 (UK)	1979~91	44.5 b	11.9
프 랑 스	1983~91	8.24 b	1.5
이 태 리	1983~91	6.25 b	1.4
네 델 란드	1987~91	1.50 b	1.0
스 웨 덴	1987~90	1.30 b	1.2
스 페 인	1986~90	1.20 b	0.5
오 스트리아	1987~90	0.60 b	0.9

주 : 위의 내용은 Pitelis and Clarke(1993)의 Table 1.1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 (b : billion)

프랑스는 영국보다 민영화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더욱 중시하였다. 민영화가 주식의 공개매각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정부분(약 10%)의 주식을 민영화되는 기업의 근로자가 20%까지의 할인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으며 또한 이들이 일정기간동안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너스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근로자가 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있었는데 산업개발연구원(Institut de Développement Industriel)의 경우가 그 예이다.

민영화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7명으로 구성되는 민영화위원회(Privatisation Commission)를 구성하였는데 이들의 주요 임무는 민영화되는 기업의 자산평가와 공기업을 간접 매각할 경우에 매각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민영화를 직접 실천하는 조직은 아니나 민영화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하며 이들 의견은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민영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환영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통하여 민영화를 제한하였다.

3. 민영화가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일반적으로 민영화는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인식되고 있다.³³⁾ 하지만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대부분 재정적 압박이나 기술혁신을 통하여 민영화이전부터 고용의 감소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고용감소가 민영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Colling and Ferner,

33) Boycko, Shleifer and Vishny(1996)는 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 과잉고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민영화가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이론적 모델(theoretical model)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의 과잉고용이라는 그들의 전제는 공기업의 경영자는 과잉고용을 통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1995). 예를 들면, 1993년에 36개 OECD국가들의 고용을 조사한 통계보고서에서 표본기업들의 64%가 민영화 후에 오히려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orld Labour Report, 1995). 물론 민영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과정과 고용의 관계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영국의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고용상황

(단위 : 천명)

기업명	1980년	민영화 (시기)	1993
British Telecom	240.1	241.1 ('84)	170.7
British Gas	104.3	89.8 ('86)	74.5
British Airways	56.9	40.7 ('87)	49.0
British Steel	166.0	53.7 ('88)	46.0
Regional Elec. Co.	95.7	82.4 ('90)	82.3 ('92)
National Power	.	14.5 ('91)	7.4
PowerGen	.	8.8 ('91)	4.9

주 : Colling and Ferner(1995)의 Table 16.2를 참조한 것임.

<표 5>에 나타난 고용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이전부터 고용이 감소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민영화 이후에 오히려 고용이 증가한 경우도 영국항공에서 나타나고 있다.³⁴⁾ 따라서, 민영화시기와 1993년 사이에 발생한 고용감소는 민영화로 인한 고용감소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Colling and Ferner(1995)의 주장인 것이다.³⁵⁾ <표 5>의 나타난 결과만

34) Colling and Ferner(1995)에 의하면 영국항공에서 민영화 이후에 고용이 증가한 것은 약 4,5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35)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민영화는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사전준비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하였듯이 민영화의 선행조건으로 시장의 경쟁성 확보가 중요한데 이는 수년의 기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민영화 시점을 기준으로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려는 Colling and Ferner의 방법은 충분히 반박의 소지가 있다.

보면 민영화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영국통신 한 기업에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³⁶⁾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많은 민영화된 기업들이 민영화이전부터 고용감소 현상을 보여왔다는 것 외에도 첫째,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경제구조의 재편성과 함께 발생하며 둘째, 정부가 민영화되는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민영화가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도 그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민영화에 대하여 우려하는 또 한가지 측면은 근로조건의 악화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연금이나 급여이외의 복지부문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민영화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민영화를 반대해 왔다.³⁷⁾ 민영화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화는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민영화된 기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의 변화이고 둘째는 민영화로 인해 해고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사람들의 근로조건의 변화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민영화에 직면한 근로자들에게 가능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영화로 초래되는 근로조건의 변화에 근로자 스스로가 대처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당시 근로자에게 공공부문의 근로조건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민간부문의 근로조건을 따를 것인지의 선택권을 주었고 캐나다, 일

36)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려는 많은 연구는 단순히 민영화 후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한다면 <표 5>에 나타난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민영화로 인해 고용이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다. Colling and Ferner가 취한 방법은 민영화 전의 고용추이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데 기존 방법보다 한발짝 더 전진한 평가방법이라 하겠다.

37) 물론 공기업의 공공성 유지도 노동조합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본,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도 민영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선택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World Labour Report, 1995). 이들 나라에서는 또한 민영화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³⁸⁾에 대하여 퇴직금, 자발적 조기 퇴직 보상금 및 각종 사회보상기금 등으로 민영화의 충격을 완화하려 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율, 기능,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우선 조직율면에서 보면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80년대에 새로 설립된 사업장에 대한 노조인정율(union recognition)이 현격히 감소하였고 (Disney, Gosling and Machin, 1996), Bamber and Snape(1993)도 노사관계실태조사(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Survey)에 의한 통계를 인용하면서 종업원 25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한 육체노동자의 조직율은 1984년에 58%이었던 것이 1990년에 48%로 하락하였으며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사업장수는 1984년에 66%에서 1990년에 53%로 감소하였다고 말하고 있다.³⁹⁾

또한, 민영화의 압력아래 혹은 민영화과정에서 교섭의 구조가 분권화됨으로써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수도·전기사업의 민영화후 전국적인 교섭구조가 깨져 사업장단위의 교섭구조로 변한 것은 분권화의 한 예이다. 또한, 교섭의 일원화(single-table bargaining)현상⁴⁰⁾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일

38) 민영화로 직장을 잃을 경우 이를 반드시 비자발적으로 볼 수 없다. 일부 국가 (예: 아프리카의 토고)에서는 민영화 당시 비자발적인 고용종결이 많았으나, 민영화 당시 근로자에게 회사에 남아 있을 것이지 아니면 퇴직할 것인 지의 선택권을 주었던 나라도 있다. 스페인이 그 중 하나인데 이 나라에서는 민영화 당시 근로자에게 ① 조기퇴직, ② 퇴직금과 18개월 동안의 실업급여, ③ 회사에 남아 있을 경우 이전 급여의 80%와 보너스의 3가지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주었다. 이들 방법을 선택한 근로자의 비율은 각각 25%, 40%, 35%로 나타났다.

39) 영국에서 대부분의 단체교섭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Bamber and Snape, 1993). 따라서, 노동조합이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사용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영국통신의 자회사들은 노동조합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Colling and Ferner, 1995)

40) 교섭의 일원화란 한 산업 혹은 한 기업에 여러 직종의 노동자가 근무할 때 종전에는 직종별로 교섭을 하던 것이 이제는 직종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포괄

부 노동조합의 통합을 유도하였다. 예를 들면 1993년에 중앙·지방정부노동조합(NALGO), 전국공무원노동조합(NUPE), 의료보험서비스노동조합(CHSE)이 통합되어 영국최대의 공공부문노동조합인 Unison을 탄생시켰다.

민영화는 노동의 유연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프랑스의 Renault자동차회사가 1990년에 민영화과정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잘 나타나고 있다 (Social and Labour Bulletin, 1990). 이 단체협약은 두가지의 협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번째 협정은 자동화에 따른 직무체계의 변경에 관한 협정(Job Classification Agreement for Automated Equipment)이고 두번째 협정은 인적자본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Human Resources)이다. 이 중 두번째 협정은 새로운 작업방법의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한 주의 마지막 날에), 파트타임 등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영화는 규제완화 내지 효율성 제고라는 기본철학 위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을 규율하는 법이나 제도의 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노사관계의 규제완화가 민영화의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민영화로 인해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다. 또한 민영화가 반드시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공공부문의 노동3권은 대체로 정부의 통제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데, 41) 민영화는 이러한 제약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 자체로 고용이 감소하고 근로조건이 악화된다고 하는 일반적 주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민영화가 고용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ILO와 EEC가 정한 노사관계의 기준을 부록에 소개한다.

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41) 우리 나라의 예를 들면, 공무원, 교사에 대한 노동3권의 제한과 공기업들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 등이 이러한 제약에 속한다.

第 4 章

韓國의 民營化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은 대개 효율성 증대를 강조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공공성 내지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강조하여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입장으로 나누어진다.⁴²⁾ 하지만,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다분히 민영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막연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민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져 왔고⁴³⁾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에 대한 분석은 미진한 실정이다.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민영화의 경험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증대하였는지 혹은 고용을 감소시켰는지를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에

42) 민영화에 대한 주장이 반드시 이렇게 양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담배인삼공사노동조합은 민영화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민영화의 방법이 재벌들의 분할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국민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3) 민영화의 과거 경험으로는 1969년에 민영화된 대한항공, 1978년에 민영화된 인천제철 등이 있으며, 1982~83년에 민영화된 신탁, 조흥, 한일, 제일은행이 있다.

대한 찬반입장은 이러한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의 민영화 추진상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민영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 고용 측면을 구체적으로 따져 볼 것이다. 민영화에 대하여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찬반의견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한국의 민영화 추진 현황

우리 나라의 민영화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⁴⁴⁾ 하지만 이 시기의 민영화는 정부의 일관된 민영화 방침에 의거하기보다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1968년의 조선업, 대한항공의 민영화와 동시에 1960~70년대에 걸쳐 더 많은 공기업들이 설립되었다는 데 있다.⁴⁵⁾

우리 나라 공기업은 민간부문이 자본, 기술의 제약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을 수행할 수 없는 자본집약적 산업을 떠맡거나 민간부문이 효과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설립된 공기업은 1960~7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그 후에 민간부문의 성장을 통하여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1981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시행하였으며 1982~83년에 이르러 먼저 금융업(신탁, 조흥, 제일, 한일은행)을 민영화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에는 23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의 민영화 방침을 수립하였다.

1987년에 계획된 민영화의 특징은 국민주방식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주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의 협력·참여를 제고하고 부의 재분배효과도 얻으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⁴⁶⁾ 당시 민영화의 기준은 공

44) Byong-Kyun Kim(1996) 참조.

45) 1960~70년대에 설립된 대표적인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전력공사(1961), 한국산업은행(1969), 포항종합제철(1972), 근로복지공사(1977)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대회(1994) 참조.

공정, 자본의 크기, 수익성의 3가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⁴⁷⁾ 1987년의 민영화 계획 추진결과 1988년 4월에 포항제철 주식의 34.1%를 국민주로 팔았으며, 1989년 8월에 한국전력 주식의 21%를 국민주로 팔았으나 전반적으로 민영화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90년이후의 증권시장 침체가 국민주를 통한 지속적인 민영화를 어렵게 만든 이유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1987년의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는 실질적인 민영화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재홍, 1994).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부가 전체 주식의 51%이상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기업은 여전히 정부의 정치적 영향아래 놓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당시 국민주 방식은 사회의 특정 계층(저소득층)에만 참여를 한정했으며 주식의 가격도 시장가격 이하로 할인하여 제공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임응기, 1993).

1993년 2월에 집권한 현 정부는 1993년 12월에 「공기업민영화 및 직능조정방안」을 내놓으면서 8개의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과 60여개의 재투자기관의 새로운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민영화의 원칙은 아래의 3가지로 요약된다 : 48)

- ① 민영화를 통하여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모든 공기업은 민영화가 되어야 한다.
- ② 원래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약화된 공기업은 합병되거나 재조직되어야 한다.
- ③ 남아 있는 모든 공기업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센티브(incentive)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46) 당시 국민주는 최고한도 49%의 주식을 월급여 60만원이하의 서민에게만 할인 가격으로 배분한다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효과를 가져오려 하였다 (송대회, 1994).

47) Byong-Kyun Kim(1996) 참조.

48) Byong-Kyun Kim(1996) 참조.

1987년의 민영화방침과 비교할 때 위의 3가지 원칙은 효율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87년의 민영화방침이 국민주방식을 기본으로 한 것에 반해 1993년의 민영화방침은 국민주의에 공개입찰과 직접판매도 민영화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3번째 원칙에서 나타나듯이 1993년의 민영화 계획은 공기업의 소유권이전 뿐 아니라 그것이 어려운 공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점⁴⁹⁾에서 1987년의 민영화 계획보다 더욱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표 6> 민영화 추진 실적 (1996년 3월 현재)

형 태		1994	1995~96
경영권이 양	완료	대한중석, 한국종합기술개발, 토개공시설공단, 한국비료, 공영기업	기 은 전 산 개 발 고속도로시설공단
	부분 완료	국민은행(주식증자)	국 민 은 행 남 해 화 학 주 택 은 행
일부지분 매 각	완료	이양탄좌, 연합TV뉴스, 매경TV뉴스, 한성생명보험, 한국경제신문, 한외종금, 럭키금속, 동부화학	내장산관광호텔
	부분 완료	이동통신, 외환은행	국 정 교 과 서

출처 : 제6차 민영화추진 대책위원회 보고서(재경원, 1995),
 송대회(1994)의 <부표1>, 매일경제신문('96. 7. 30), 국민일보 ('96. 6. 18)

1993년의 민영화 계획은 민영화추진실무대책반,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 등의 민영화 전담반을 구성하여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적에 있어서는 역시 미비했다. 민영화추진 2년이 지난 지금 민영화대상 58개사 중 16개사의 민영화가 완료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 중 경영권이 이양된 곳은

49) 민간부문의 경쟁체제 혹은 인센티브시스템(incentive system), 보상차별화 등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하상목(1995)이 있다.

대한중석과 한국비료를 비롯한 7개사에 불과하다. 특히, 민영화의 상징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은 아직 민영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 이후의 민영화 추진 현황은 <표 6>에 잘 나타나 있다.

현 정부가 출범초기에 나타냈던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민영화 주관부서의 소극적 추진 자세 (송대회, 1994)
- ② 재벌의 민영화참여 반대여론 (송대회, 1994)
- ③ 계획의 졸속성 및 치밀성 결여 (임휘철, 1995)
- ④ 민영화 방법의 미결정 (임응기외 3인, 1993; 송대회, 1994; 임휘철, 1995)

위에 제시된 이유들에 대하여 부연하면, 첫번째 이유는 민영화를 주관하는 부서와 산하 공기업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영화가 진척이 느리다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민영화위원회(Privatisation Commission)와 같은 별개의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대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하는데 있어서 재벌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이유는 민영화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으로서, 민영화를 시작하기 앞서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민영화 근거법을 제정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법의 제정 없이 행정적으로만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영화에 대한 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1987년의 민영화계획이 국민주방식을 채택한데 반하여 1993년의 민영화계획은 효율성을 중요한 나머지 어떤 특정 방법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주방식을 채택할 경우 주인 있는 경영을 해야한다는 비판을 받고 반대로 주인 있는 경영을 강조할 경우 대기업이 주주

가 되고 따라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다는 비판을 받는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적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부재현상이 민영화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민영화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나라의 민영화실적은 정부의 민영화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한정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무한경쟁체제의 도입, 세계경제의 일원화 속에서 우리 나라 경제의 효율성, 경쟁성을 높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시급한 것이라는 정부의 거창한 교육 및 홍보에 비하면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실적은 정말로 미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⁵⁰⁾

2. 민영화의 경험 분석

가. 기존 연구의 소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여러 찬반논의는 효율성, 공공성, 소득재분배, 경제력집중, 고용불안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증적 연구에 기초한 주장은 극히 적다. 그렇다고 민영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우리 나라에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영화의 효율성 증대여부를 분석한 연구로는 강신일(1988), 송대화·송명희(1992), 최종원(1994)이 있다.

강신일(1988)은 1987년까지 민영화된 15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가 비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50) 오히려 행정규제나 공기업화는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작성한 「한국의 시장개방 전망」이라는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규제를 많이 철폐했다고 주장하지만 94년말 현재 행정규제는 1만1천7백15개로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3백20개가 더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일보 1996년 6월 18일), 민영화의 경우 1996년 6월말 현재 공기업의 수는 1992년 6월에 비하여 3개사가 줄었으나 정부가 보유하는 공기업의 지분율은 동기간에 오히려 3.3%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

<표 7> 민영화가 생산비용에 미친 영향

	민영화후 비용감소	민영화후 비용증가	민영화후 비용 불변동
회사명	대한통운 대한항공 신택은행 유 공	해운공사	조선공사, 인천중공업 광업제련, 대한염업 상업은행, 대한재보험 준설공사,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계	4	1	10

주 : 강신일(1988)의 <표 2-13>의 회귀분석결과를 t-test (유의수준 0.05) 한 것임.

위의 내용을 보면 민영화가 반드시 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민영화후 비용이 감소한 회사는 전체 조사대상 15개 회사중 4개에 불과하며 다른 10개 회사에서는 민영화후 비용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해운공사의 경우는 민영화후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대희·송명희(1992)는 국민주 방식으로 1988년과 1989년에 일부 민영화된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검토하였는데 포항제철의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민영화이후 감소하였고 한국전력의 경우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영업이익률이 증가하였으나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영업이익률이 민영화이후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에서도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다.⁵¹⁾

실증적인 또 하나의 연구로서 최종원(1994)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1인당 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1) 송대희·송명희(1992)는 민영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회귀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민영화 이전 3년간과 민영화 이후 3년간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단순비교는 민영화의 순수한 영향을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표 8> 민영화가 1인당 생산성에 미친 영향			
	민영화후 생산성증가	민영화후 생산성감소	민영화후 생산성 불변동
회사명	대한항공 대한석유공사 대한재보험	인천중공업 1 한일은행	대한통운, 대한광업제련 인천중공업 2 상업은행, 제일은행 신택은행, 조흥은행
계	3	2	7

주 : 최종원(1994)의 <표 2>의 회귀분석결과를 t-test (유의수준 0.05) 한 것임

<표 8>의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민영화가 반드시 효율성제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대한항공, 대한석유공사(유공), 대한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민영화가 생산성을 높였다는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영화는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왜 위와 같은 경험적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위의 저자들의 설명중 가장 중요하면서 공통적인 것은 민영화후 계속적인 정부의 규제이다.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경우는 '88년, '89년에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였더라도 아직도 정부의 관리하에 있으며⁵²⁾ 80년대 초에 민영화된 은행들은 민영화 이후에도 은행법, 여수신이율관련규정, 외국환관련규정 등의 정부규제를 계속 받았고 또한 정부는 경영권, 인사권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실증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민영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서 김대환(1996)이 있다. 김대환(1996)은 민영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그는 민영화가 고용을 감소시키고, 임금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동강도를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환이 제시하는

52) 1995년 현재 포항제철의 경우 산업은행이 14%, 재무부가 19.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의 경우 정부가 77.6%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증거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영국통신과 일본국철)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앞으로 이들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외국에 경우에는 우리 나라보다 훨씬 민영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많은데 앞서 언급한 Colling and Ferner(1995)의 연구는 영국의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하나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민영화가 효율성에 미치는 외국 연구는 항공, 금융, 운송, 전기, 보험, 청소업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다.⁵³⁾ 대체적으로 이들 연구는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전기, 보험, 청소업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민영화가 비용감소나 수익증가를 가져왔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연구도 있다. 특히, 청소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도 존재한다.

나. 민영화의 효율성 증대효과 분석

이제 최근 우리 나라의 민영화 경험을 효율성측면에서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한국비료(현재 삼성정밀화학), 대한중석,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현재 신한종합건축사), 한국이동통신, 동부화학, 엘지금속, 한외종합금융, 한국외환은행 등 8개회사인데 이들은 앞의 <표 6: 민영화 추진실적>에 나타난 회사 중에서 자료수집이 가능한 기업들로 구성되었다.⁵⁴⁾ 연구기간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로 정했는데 이 또한 자료수집의 한계로 제한되었다. 이들 8개 기업의 회사소개와 정부주식소유현황 및 민영화 비율은 부록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데 근로자 1인당 생산량, 판매량, 부가가치 혹은 단위제품당 노동비용이

53) 이들 연구에 대한 결과는 Wolf(1994)의 Appendix B에 개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54) <표 6>에서 보듯이 1994년에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기업은 이들 8개 회사 외에 몇 개 더 있으나 자료수집의 곤란으로 8개 공기업에 국한하였다.

나 생산비용 등이 많이 사용된다. 기업별 비용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관계로 여기서는 최종원(1994)의 방법에 따라 1인당 매출액을 효율성의 척도로 삼고자 한다.

<부록 표 1>은 근래에 완전 혹은 부분 민영화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 전·후의 1인당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흔히 “민영화는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민영화이전과 이후의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를 모델(model)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ln(Q/L)_t = a + b * PRIVATE_t + \epsilon_t \text{ -----(3)}$$

즉 1인당 매출액(Q/L)은 민영화여부(PRIVATE)의 함수라는 것이다. 식 (3)에서 b가 양수면 민영화가 1인당 매출액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b가 음수면 민영화가 오히려 1인당 매출액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부록 표 1>에 나타난 8개의 대상기업중 완전민영화된 기업은 한국비료, 대한중석,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동부화학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식 (3)을 추정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민영화가 1인당 매출액에 미친 효과

	1인당 매출액	
	PRIVATE	CONSTANT
한 국 비 료	57.616* (2.643)	231.65* (23.76)
대 한 중 석	33.343* (3.381)	39.330* (8.917)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9.481 (1.831)	29.009* (12.53)
동 부 화 학	74.494 (1.456)	168.64* (3.686)
4 社 중 합 a	90.861* (2.765)	105.28* (5.415)
4 社 중 합 b	43.766* (3.257)	-

주 : 1) ()안의 값은 t값임.

2) *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표시함.

3) a는 OLS Model, b는 Fixed-Effects Model.

위의 나타난 결과를 보면 민영화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비료와 대한중석의 경우는 민영화후 1인당 매출액의 증가가 확연하지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나 동부화학의 경우는 민영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영화이후에 1인당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즉 4사 종합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인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표 9>에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민영화의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민영화이후에 민영화와 상관없이 자본, 고용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영화 이전에 비해 민영화이후에 자본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늘어나고 따라서 1인당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증가가 민영화 때문에 일어났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민영화 이전에도 이러한 방식의 1인당 매출액 증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영화에 의한 생산성 증가는 같은 노동량과 같은 자본량하의 생산성 증가이어야 하며 이는 민영화로 인한 경영합리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민영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민영화가 이들 공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민영화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를 민간에게로의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회사의 소유권은 민간에게 완전히 이전되지 않더라도 경영이 정부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민영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며 기업의 경영이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는 경우이다. 셋째, 민영화를 연속적인 정부지분의 감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민영화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에 앞서 경영합리화 혹은 상업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에 기초한다.

55) 이러한 효율성증가를 X-Efficiency라고 말할 수 있다.

민영화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이와 같은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모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ln(Q/L)_{it} = a_{1i} + a_2 T_{it} + a_3 \ln(K/L)_{it} + a_4 \ln L_{it} + a_5 \text{PRIVATE}_{it} + \varepsilon_{it} \text{ -----(4)}$$

$$\ln(Q/L)_{it} = b_{1i} + b_2 T_{it} + b_3 \ln(K/L)_{it} + b_4 \ln L_{it} + b_5 (\ln K/L)_{it}^2 + b_6 \text{PRIVATE}_{it} + \varepsilon_{it} \text{ -----(5)}$$

$$\ln(Q/L)_{it} = c_{1i} + c_2 T_{it} + c_3 \ln(K/L)_{it} + c_4 \ln L_{it} + c_5 (\ln K/L)_{it}^2 + c_6 (\ln L)_{it}^2 + c_7 [(\ln K/L)_{it} \cdot (\ln L)_{it}] + c_8 \text{PRIVATE}_{it} + \varepsilon_{it} \text{ -----(6)}$$

식 (4)~(6)은 최종원(1994)이 사용한 모델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⁵⁶⁾, Q는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 K는 총자산, L은 종업원수, T는 연도, PRIVATE은 민영화를 측정하는 변수를 각각 나타낸다.⁵⁷⁾ 위의 3가지 모델은 다시 민영화를 나타내는 PRIVATE 변수를 3가지 방법으로 정의하여 추정된다. 첫번째는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온 것같이 완전민영화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설정하였고, 두번째는 정부소유 주식지분이 50%이상인지의 여부로 더미를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영화를 과정으로 보아 PRIVATE 변수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측정하였다⁵⁸⁾. 이러한 3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식 (4)~(6)의 결과는 <표 10>에 보고된다.

56) 다만 최종원(1994)은 식 (4)~(6)을 기업별로만 추정하였고 여기서는 전체기업을 합쳐서 추정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57) 모델에 사용되는 변수의 선정문제는 이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공장의 증축이라든가, 민영화로 인한 경영혁신제도의 도입유무 등의 변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를 목적으로 생산함수의 추정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효율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1인당 매출액을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다.

58) 이 경우 PRIVATE변수는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이다.

<표 10> 1인당 매출액 함수의 추정치 (Fixed-Effects Model)

변수/식	완전민영화기준 (더미변수)			민간지분 50%이상 기준 (더미변수)			민간소유 주식지분기준 (연속변수)		
	(4)	(5)	(6)	(4)	(5)	(6)	(4)	(5)	(6)
T	0.06* (4.96)	0.06* (4.26)	0.05* (3.89)	0.04* (3.14)	0.04* (3.07)	0.04* (3.21)	0.05* (4.24)	0.04* (3.77)	0.05* (4.18)
lnK/L	0.14 (1.22)	0.41 (1.03)	2.11 (1.44)	0.44* (6.76)	0.69* (2.64)	0.87 (1.19)	0.49* (9.65)	0.46* (3.73)	0.91* (2.77)
lnL	-0.34 (-1.58)	-0.34 (-1.53)	9.77 (1.47)	0.36* (4.59)	0.39* (4.65)	-1.27 (-1.31)	0.31* (5.24)	0.31* (5.22)	-1.24* (-1.98)
(lnK/L) ²		-0.03 (-0.72)	-0.02 (-0.62)		-0.03 (-0.98)	-0.04 (-1.00)		0.004 (0.33)	-0.001 (-0.03)
(lnL) ²			-0.65 (1.48)			0.13* (1.00)			0.14* (2.44)
(lnK/L)· (lnL)			-0.26 (-1.30)			-0.01 (-0.03)			-0.06 (-1.23)
PRIVATE	-0.09 (-1.15)	-0.09 (-1.06)	-0.07 (-0.87)	-0.13 (-1.27)	-0.06 (-0.53)	-0.13 (-1.12)	-0.003 (-1.80)	-0.002 (-1.74)	-0.003* (-2.13)
R ² - Adjusted	0.79	0.78	0.79	0.93	0.93	0.94	0.89	0.89	0.90
Degrees of freedom	32	31	29	32	31	29	68	67	65
N	40	40	40	40	40	40	80	80	80

주: 1) ()안의 값은 t값임.
 2) *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표시함.

<표 10>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민영화가 1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영화를 민간소유지분의 증가로 볼 때 민영화가 오히려 1인당 매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식 (6)의 경우). 앞의 <표 9>에서 민영화가 1인당 매출액을 증가 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표 10>에서는 완전 민영화된 4개회사에서 민영화 효과가 중요치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9>에 나타난 민영화 효과가 순수히 민간으로의 경영권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영혁신이나 경영합리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진행된

되어 온 기술변화(T), 자본장비율(lnK/L) 및 고용(lnL)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기업별 1인당 매출액 함수의 추정치 (OLS)

변수/식	완전민영화기준 (더미변수)			민간지분 50%이상 기준 (더미변수)			민간소유 주식지분기준 (연속변수)		
	T	lnK/L	Private	T	lnK/L	Private	T	lnK/L	Private
한국비료	-0.01 (-0.17)	0.91 (1.02)	-0.08 (-0.88)	-	-	-	-0.01 (-0.17)	0.91 (1.03)	-0.002 (-0.88)
대한중석	-0.04 (-1.35)	0.68* (4.74)	-0.05 (-0.39)	-	-	-	-0.03 (-0.97)	0.69* (5.69)	-0.01 (-1.00)
한국종합	0.08 (2.53)	0.14 (0.37)	-0.16* (-2.00)	0.08 (2.53)	0.14 (0.37)	-0.16* (-2.00)	0.08 (2.53)	0.14 (0.37)	-0.002* (-2.00)
동부화학	0.11* (4.37)	-0.22 (-0.44)	0.03 (0.05)	0.11* (4.37)	-0.22 (-0.44)	0.03 (0.05)	0.12 (3.47)	-0.12 (-0.53)	0.002 (0.36)
이동통신	-	-	-	0.18* (3.87)	0.48* (6.58)	-0.13 (-0.69)	0.13* (2.27)	0.50* (7.11)	0.003 (0.57)
엘지금속	-	-	-	-	-	-	0.04* (3.64)	0.71* (4.82)	0.01* (2.30)
한외종합	-	-	-	-	-	-	-0.27 (-1.42)	2.71 (2.00)	-0.0003 (-0.02)
외환은행	-	-	-	-0.01 (-0.92)	-0.07 (-0.23)	0.25* (2.83)	0.02 (0.87)	0.58 (1.50)	-0.003 (-0.84)

주 : 1) ()안의 값은 t값임. 상수항은 지면상 보고를 생략했음.

2) *는 0.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표시함.

3) 민영화 기준에 변화가 없는 기업은 “-” 로 표시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별 시계열자료가 적다는 한계를 감수하고 이전 연구자들이 취했던 방법을 사용하여 각 회사별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만 여기서는 가능한 한 자유도(degrees of freedom)를 늘리기 위하여 식 (4)만을 선택하고 또한 고정규모수익률(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대한 보고는 <표 11>에 나타난다.

위의 표에서 민영화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민영화가 효율성 증대에 끼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민영화가 1인당 매출액에 미친 영향(요약)

	민영화후 생산성 증가	민영화후 생산성 감소	민영화후 생산성 불변동
회사명	엘지금속 (민간지분기준) 외환은행 (민간지분50%이상기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3기준 모두)	한국비료 대한중석 동부화학 한외종합금융 한국이동통신
계	2	1	5

<표 12>에 나타난 패턴(pattern)을 보면 강신일(1988), 송대희·송명희(1992), 최종원(1994)의 연구결과와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다수의 기업에 있어서 민영화의 생산성 증대효과는 불분명하고 민영화가 생산성을 감소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최근에 민영화된 혹은 민영화과정에 있는 기업들의 효율성 증대여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명약관화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영화가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적지만 이러한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민영화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경쟁적이어야 하고, 둘째, 민영화이후에 정부의 규제에서 해방되어야 하거나 설사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제가 일관성(consistency)을 지녀야 하며⁵⁹⁾ 마지막으로, 공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은 인수한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표 12>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각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의 경쟁성을 살펴보았다.

59) Willig(1993)은 정부의 정책(Tax and Transfer)이 일관성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민영화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표 13>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 장 지 위
엘지금속	'95년 현재 전기동시장의 93%, 금의 60%, 은의 40%, 황산의 16%. 제련부문에서는 독점적 지위이나 가공부문에서는 경쟁이 치열함
외환은행	'95년 현재 5대시중은행대비 총수신의 13.2%, 원화대출금의 13.7%.
한국비료	'95년 현재 농업용 요소시장의 40%, 공업용 요소의 60%, 메라닌의 90%, 암모니아의 70%, DMF의 90%.
대한중석	'95년 현재 텅스텐분말 시장에서는 국내 독점적 지위. 초경합금공구: 업계 1위. 시장점유율(전체): 38% 초경합금시장은 비교적 낮은 경쟁
이동통신	'95년 현재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은 100%, 무선호출: 55.2%
동부화학	'95년 현재 석유화학부문의 SM시장의 24% (엘지화학, 삼성화학, 현대석유화학 등 대기업과 경쟁) 석유화학부문의 PS시장의 14%
한외중금	'95년 현재 총자산 점유율: 12.7%, 영업수익 점유율: 12%, 당기순이익 점유율: 14.1%
한국종합	기술용역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완화되면서 경쟁강화. '95년 현재 시장점유율 1.41%
<p>주: 부록 "민영화 효과분석의 대상기업 및 회사연혁"에서 요약한 것임.</p> <p>위에 나타난 대상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검토하면 민영화의 성패는 부분적으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업계가 얼마나 경쟁적인가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⁰⁾ 민영화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난 외환은행은 경쟁이 매우 강한 금융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영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난 한국비료, 대한중석, 이동통신은</p> <p>60) 한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의 경쟁성을 전적으로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예로 경합이론(Theory of Contestable Market)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 산업을 한 기업이 독점하더라도 다른 많은 기업들의 시장진출이 용이하면 독점기업은 상당한 경쟁압력을 받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p>	

경쟁이 약한 시장구조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시장의 경쟁성만으로는 민영화의 성과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종합기술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민영화의 효과는 오히려 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쟁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의 경영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부화학, 대한중석의 경우에 민영화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민영화당시 이들 기업은 제조업에서의 경험이 부족하였다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말하고 있다.⁶¹⁾

민영화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효과가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민영화 뿐 아니라 조세정책, SOC산업에 대한 투자, 금융정책 등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경제 풍토에서는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회복이 민영화의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다. 민영화의 고용효과 분석

다음으로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Colling and Ferner(1995)는 민영화가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일반적 견해가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영화의 효율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있었어도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연구는 없었다.⁶²⁾ 민영화가

61)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들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소개될 것임.

62)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민영화 효율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효율성을 Output/Input으로 정의하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Input 한 단위당 Output을 증대시키거나 Output 한 단위당 Input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Output 한 단위당 Input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 생각해 볼 시나리오는 민영화를 통하여 생산방식이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에서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공기업의 특성 중 하나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생산조직에 변화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⁶³⁾ 이러한 공기업의 속성이 민영화와 함께 사라지고 생산방식이나 조직의 변화를 통하여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 없이도 공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왔고 특히 과잉고용을 해왔다는 주장이 맞다면 민영화 후에 같은 수준의 생산을 할 경우에 고용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⁶⁴⁾ 이 두가지 경우를 데이터 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떠한 경우건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노동량은 줄어든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동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다.

우선 여기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야기되는 “민영화는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명제에 대하여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량과 민영화의 관계를 식 (3)과 같이 상정하고 이를 추정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Colling and Ferner(1995)의 주장과 같이 “민영화가 고용을 줄인다”고 하는 명제는 아래의 결과에서도 100%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완전 민영화된 4개회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OLS의 경우에 10%수준에서만 유의하며 Fixed-Effects Model에서는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기업의 경험에서는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국비료의 경우는 민영화 이후 고용이 증가하였고 대한중석과 동부화학의 경우는 민영화 이후 고용이 감

63) 이러한 특성은 공기업의 경영자의 목적함수에는 정치성이 포함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즉 변화는 실패할 경우 적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경영자의 정치적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자는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64) 이 경우 생산방식의 변화보다는 조직구조의 변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부화학의 경우는 민영화후 약 23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민영화가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14> 민영화가 종업원수에 미친 효과

	종업원수	
	PRIVATE	CONSTANT
한국비료	49.50* (2.70)	660.50* (80.67)
대한중석	-373.38 (-1.79)	1354.90* (14.56)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31.88 (-0.93)	712.88* (46.28)
동부화학	-233.13* (-4.21)	936.50* (18.91)
4社 종합 a	-170.64** (-1.79)	911.50* (16.16)
4社 종합 b	-147.22 (-0.44)	-

- 주 : 1) ()안의 값은 t값임.
 2) *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표시함.
 3) **는 0.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표시함.
 4) a는 OLS Model.
 5) b는 Fixed-Effects Model.

<표 14>에 나타난 결과가 순수히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경영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한국비료의 경우 민영화후 3개의 공장을 준공하였고 이로 인해 고용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용의 증가가 경영권의 이양 때문에 이룩되었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수요의 함수에서 자본, 생산량 등을 통제하여야 한다. 즉,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과잉고용이 있었다면 민영화를 통해 기업은 같은 자본으로 같은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적은 노동량을 사용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테스트하고자 한다.

<표 15>는 8개회사의 고용상황을 상세히 나타내고 있다.

<표 15> 고용 현황 (총인원)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한국비료	676	676	671	670	659	672	662	684	677	769
대한중석	1,949	1,965	1,972	1,879	1,722	1,504	973	934	983	1,032
종합기술	736	716	617	709	740	766	737	682	668	694
이동통신	73	193	300	508	786	1,216	1,609	1,995	2,223	3,008
동부화학	913	971	880	725	670	721	700	676	677	689
LG금속	1,389	1,511	1,585	1,759	1,772	1,671	1,472	1,277	1,215	1,288
한외중금	104	113	112	112	116	117	123	128	129	144
외환은행	8,011	7,885	7,827	8,169	8,168	8,431	8,411	8,157	8,363	8,464

주 : 1) 위 고용수치는 임원 및 기타직을 포함한 총 수치임.

2) 동부화학의 1986~89년의 고용인원은 동부석유화학과 영남화학을 합한 것임.⁶⁵⁾

앞서 언급한대로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취할 방법은 노동수요(labour demand)이론이다. 즉, 생산량, 요소가격을 통제한 후에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노동수요함수는 아래의 두 함수이다.

$$\ln(L)_{it} = a_1 + a_2 T_{it} + a_3 \ln W_{it} + a_4 \ln K_{it} + a_5 \ln Q_{it} + a_6 \text{PRIVATE}_{it} + \varepsilon_{it} \text{ ----- (7)}$$

$$\ln(L)_{it} = a_1 + a_2 T_{it} + a_3 \ln W_{it} + a_4 \ln R_{it} + a_5 \ln Q_{it} + a_6 \text{PRIVATE}_{it} + \varepsilon_{it} \text{ ----- (8)}$$

위 식에서 Q, K, L, T의 정의는 전과 같고 W는 임금총액(연인건비/12), R은 자본비용을 나타낸다. PRIVATE은 민영화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전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정의된다. 식 (7)은 단기적 노동수요모델(Short-run Labour Demand)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식 (8)은 장기적 노동수요모델(Long-run Labour Demand)이라고 볼 수 있다. 식 (7)-(8)의 추정결과는 <표

65) 1989년 영남화학의 고용을 알 수 없는 관계로 '89년 해고자 199명을 '88년 종업원수에서 감하여 추정했음. 실제로 '89년의 종업원수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측 됨.

16>에 보고된다.

아래 표에 나타난 민영화변수(PRIVATE)의 계수값을 보면 전반적으로 민영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은 미약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만 민간소유지분으로 민영화를 측정하였을 경우에 식 (7)에서 민영화변수의 계수가 약간의 유의성을 보이는데 그 규모는 -0.2%로 매우 작다. 여기서 측정하는 민영화의 고용효과는 경영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어떠한 기업합리화과정을 통하여 같은 생산량을 보다 적은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민영화의 효율성효과가 산출량(Output)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민영화의 고용효과는 투입량(Input)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위의 결과는 민영화 전·후로 고용감소는 있었지만 이러한 고용감소가 잉여노동을 정리하는 합리화과정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하겠다. 위의 결과에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고용수준은 시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자동화, 전산화와 같은 생산기술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6> 노동수요함수의 추정치 (Fixed-Effects Model)

변수/식	경영권 민간이양 기준 (더미변수)		민간지분 50%이상 기준 (더미변수)		민간소유 주식지분 기준(연속변수)	
	(7)	(8)	(7)	(8)	(7)	(8)
T	-0.05* (-3.19)	-0.05* (-2.66)	-0.07* (-8.04)	-0.04* (-2.20)	0.002* (4.11)	-0.05* (-2.79)
lnW	0.22 (1.26)	0.17 (0.97)	0.27 (1.99)	0.24 (1.69)	-0.51* (-3.95)	0.19 (1.17)
lnK	-0.15 (-1.43)	-	0.13 (1.73)	-	-0.004 (-0.05)	-
lnR	-	0.06 (0.52)	-	0.11 (1.31)	-	0.10 (1.06)
lnQ	0.44* (3.11)	0.39* (2.58)	0.57* (8.77)	0.31* (2.04)	0.55* (6.05)	0.38* (2.95)
PRIVATE	0.05 (0.68)	-0.001 (-0.02)	-0.05 (-0.70)	-0.02 (-0.35)	-0.002 (-1.61)	0.001 (0.60)
R ² - Adjusted	0.41	0.38	0.96	0.73	0.96	0.42
Degrees of freedom	31	31	18	11	52	39
N	40	40	27	20	64	40

주 : 1) ()안의 값은 t값임.

2) *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표시함.

개별기업에 있어서 노동수요를 측정한 결과는 <표 17>과 <표 18>에 나타나 있다. 민영화가 1인당 매출액에 미친 영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민영화의 고용감소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일부기업에서만 고용감소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자본을 통제하여 노동수요를 추정한 <표 17>을 보면 민영화의 고용효과가 없는 기업으로 한국비료, 대한중석,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동부화학, 엘지금속 등 5개회사가 있으며 민영화를 통해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이동통신과 한외종합금융 등 2개회사가 있다.⁶⁶⁾

66) 외환은행은 인건비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17> 기업별 노동수요함수의 추정치 (자본통제, OLS)

변수/식	경영권 민간이양 기준 (더미변수)				민간지분 50%이상 기준 (더미변수)				민간소유 주식지분 기준(연속변수)			
	lnW	lnK	lnQ	Priv	lnW	lnK	lnQ	Priv	lnW	lnK	lnQ	Priv
한국비료	-0.15 (0.57)	0.56 (1.96)	0.02 (0.14)	-0.05 (0.83)	-	-	-	-	-0.15 (0.56)	0.55 (1.95)	0.02 (0.15)	-0.001 (0.81)
대한중석	0.04 (1.12)	1.93 (1.65)	-3.35 (1.54)	0.08 (0.32)	-	-	-	-	-0.09 (0.08)	1.73 (1.49)	-3.01 (1.43)	0.01 (0.68)
한국종합	0.01 (0.04)	0.05 (0.28)	0.47* (2.55)	0.05 (0.91)	0.01 (0.04)	0.05 (0.28)	0.47* (2.55)	0.05 (0.91)	0.01 (0.04)	0.05 (0.28)	0.47* (2.55)	0.001 (0.91)
이동통신	-	-	-	-	-0.13 (0.36)	0.45 (1.87)	1.02* (3.26)	-0.12* (2.16)	-0.11 (0.36)	0.48* (2.22)	1.03* (3.82)	-0.003* (2.54)
동부화학	0.39 (1.83)	-0.003 (0.01)	0.02 (0.11)	-0.15 (0.65)	0.39 (1.83)	-0.003 (0.01)	0.02 (0.11)	-0.15 (0.65)	0.45 (1.91)	-0.13 (0.77)	0.01 (0.03)	-0.001 (0.23)
엘지금속	-	-	-	-	-	-	-	-	1.20 (0.91)	-0.82 (0.93)	1.25 (1.49)	-0.02 (1.45)
한외종합	-	-	-	-	-	-	-	-	-0.39* (5.09)	1.17* (5.88)	-0.06 (1.17)	-0.002* (2.70)

- 주 : 1) ()안의 값은 t값의 절대치임.
 2) *는 t값이 2이상인 것을 표시함.
 3) 민영화 기준에 변화가 없는 기업은 “-” 로 표시함.
 4) 년도와 상수항은 지면상 보고를 생략했음.

앞서 언급한대로 여기에 나타나는 민영화의 고용효과는 어떠한 기업합리화과정을 통하여 같은 생산량을 보다 적은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동부화학의 경우 민영화 전·후로 고용의 감소는 있었지만 (<표 14>의 결과) 이러한 고용감소가 합리화과정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동통신과 한외종합금융은 산출방식에 있어서는 효율성의 증대는 없었지만 투입방식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이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자본비용을 통제하여 노동수요를 추정한 <표 18>을 보면 민영화의 고용효과가 없는 기업은 한국비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동부화학, 엘지금속 등 4개회사이며 민영화를 통해 오히려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대한중석으로 나타났다.⁶⁷⁾

대한중석의 경우 민영화후 고용이 증가한 것에 대한 해석은 차후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후에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여기서 나타나 결과로만 본다면 민영화후 오히려 투입방식에 있어서 더 비효율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이러한 결과가 대한중석을 인수한 거평그룹의 경영능력부재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표 18> 기업별 노동수요함수의 추정치 (자본비용통제, OLS)

변수/식	경영권 민간이양 기준 (더미변수)				민간지분 50%이상 기준 (더미변수)				민간소유 주식지분 기준(연속변수)			
	lnW	lnR	lnQ	Priv	lnW	lnR	lnQ	Priv	lnW	lnR	lnQ	Priv
한국 비료	-0.22 (0.61)	0.05 (0.47)	0.19 (0.96)	0.01 (0.07)	-	-	-	-	-0.22 (0.60)	0.05 (0.47)	0.19 (0.96)	0.0002 (0.08)
대한 중석	-0.26 (0.45)	2.69* (4.19)	-0.42 (1.44)	0.54* (3.18)	-	-	-	-	-0.11 (0.16)	1.88* (3.15)	-0.13 (0.48)	0.02* (2.44)
한국 종합	-0.02 (0.13)	-0.20 (1.44)	0.63* (4.25)	0.07 (1.66)	-0.02 (0.13)	-0.20 (1.44)	0.63* (4.25)	0.07 (1.66)	-0.02 (0.13)	-0.20 (1.44)	0.63* (4.25)	0.002 (1.66)
동부 화학	0.31 (1.62)	0.08 (1.02)	-0.03 (0.14)	-0.17 (1.87)	0.31 (1.62)	0.08 (1.02)	-0.03 (0.14)	-0.17 (1.87)	0.40 (1.85)	0.11 (1.23)	0.01 (0.08)	-0.004 (1.60)
엘지 금속	-	-	-	-	-	-	-	-	1.26 (1.12)	0.33 (1.53)	0.40 (1.32)	-0.01 (1.12)

- 주 : 1) ()안의 값은 t값의 절대치임.
 2) *는 t값이 2이상인 것을 표시함.
 3) 민영화 기준에 변화가 없는 기업은 “-” 로 표시함.
 4) 년도와 상수항은 지면상 보고를 생략했음.

67) 이동통신, 한외종금, 외환은행은 자본비용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17>과 <표 18>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19> 민영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요약)

	민영화후 고용감소	민영화후 고용 증가	민영화후 고용 불변동
자본통제	이 동 통 신 (민간지분기준) 한외종합금융 (민감지분기준)	-	한 국 비 료 대 한 중 석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동 부 화 학 엘 지 금 속
계	2	0	5
자본비용 통 제	-	대 한 중 석	한 국 비 료 대 한 중 석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동 부 화 학 엘 지 금 속
계	0	1	4

참고로 김대환(1996)의 연구에서도 대한중석이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경우에 민영화를 통해 고용불안의 요소는 증대했어도 고용이 감소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민영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정리해고가 완화된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민영화 경험과의 비교가 있어야만 보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외국과는 달리 경영상태가 좋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므로 민영화가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표본선택의 문제로서 이러한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가에 관한 선택함수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

러한 모델을 추정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영화로 인한 고용감소는 생산방식의 변화(예 : 자동화, 전산화)나 공기업하의 과잉노동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주로 조직개편과 관련될 것으로 자료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자의 생산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민영화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생산방식의 변화 즉 자동화, 전산화는 자본집약도, 노동집약도, 기계장비율 등을 높인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집약도는 총자본을 종업원수로 나눈 것으로 총자본에는 토지가격, 공장가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화, 전산화의 적절한 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장비율은 (유형고정자산-건설가계정)/종업원수로 정의되는데 자본집약도보다는 바람직하나 이 또한 건물, 토지가격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지표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계장비율은 기계장치/종업원수로 정의되며 이 지표가 자동화와 전산화의 척도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기업별로 기계장비율을 나타내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여기서는 각 기업이 속한 산업별 기계장비율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 지표는 제조업 부문에만 제공되어 금융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두 지표를 보면 <표 20>과 같다.⁶⁸⁾

아래 표에서 보면 고용감소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이동통신이 속해 있는 통신산업은 1992년과 1993년을 전·후로 기계장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부화학을 제외한 4개회사가 속해 있는 업계의 기계장비율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나 동시에 기계장비율의 등락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부화학이 속해 있는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산업의 경우는 기계장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68) 기계장비율에 대한 자료의 한계상 이 기간을 정하였음.

<표 20> 기계장비율

(단위 : 백만원)

	1992	1993	1994	1995
이동통신	2.45	103.83	103.92	112.82
엘지금속	16.30	19.38	17.98	27.89
한국비료	36.11	38.15	41.01	47.95
대한중석	13.42	10.1	11.45	13.04
동부화학	53.38	57.47	51.30	50.82
한국종합	0.45	0.64	0.32	0.89

주 : 기계장비율은 업계 평균임 (이동통신 : 통신업, 엘지금속 : 1차비철금속, 한국비료 : 비료 및 질소화합물, 대한중석 : 기타조립금속 및 금속처리업, 동부화학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한국종합 :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표 20>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동통신의 경우 타기업보다 기계장비율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산업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이동통신의 경우 노동-자본의 대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민영화과정에서 이러한 대체가 손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한 시계열자료의 한계로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하며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로 재분석하여 볼 필요가 충분하 있다.

끝으로 민영화가 어떤 기업에서 고용을 감소시키고 어떤 기업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시장의 경쟁성, 공기업을 인수한 경영자의 경영능력, 자본집약도, 노동-자본의 대체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Colling and Ferner(1995)의 “민영화가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일반적 견해가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한국의 민영화 경험에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第 5 章

事例研究

이상에서 민영화가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완전 민영화된 대한중석, 한국비료, 동부화학 등 3개회사의 노동조합간부와 민영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인터뷰(Interview)한 내용을 소개한다. 인터뷰의 내용은 위에서 분석한 생산성, 고용문제를 포함하여 민영화 과정에서의 노조의 참여, 민영화 이전과 이후의 노사관계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1. 동부화학

동부화학은 합성수지 및 화학비료 등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체로서, 1988년 3월 정부투자기업이었던 영남화학을 인수하여 동부석유화학과 합병한 회사이다. 경남 울산시 남구 매암동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995년 12월 현재 678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3천백7십2억9천9백만원에 이른다. 영남화학의 민영화 직후인 1988년 3월 종업원 107명에 대한 대

량해고에 이어 1989년 5월 종업원 199명에 대한 대량해고로 노사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영화 이전에 존재했던 영남화학의 노조조직은 약화되었다. 현재는 동부석유화학출신을 중심으로 한 노조집행부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약 340명이다. 이하에서는 1996년 10월 16일에 이루어진 동부화학의 현 노조위원장 및 민영화 당시의 영남화학 노조위원장과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가. 동부화학 현 노조위원장

Q : 민영화 이후 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보는가?

A : 공기업의 방만하고 나태한 특성이 민영화 이후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목표로 바뀌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 열 명이 할 일을 세 명이 하는 식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졌으며, 회사는 나름대로 환경개선 등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 공기업 시절에는 경영자들이 자신의 임기만 채우고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었지만 민영화 이후에는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러나 기업의 몇 가지 신규 투자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는 등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기업 성과가 좋지 않은 상태다.

Q :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 단기적으로는 고용감소가 발생하나 새로운 사업 투자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고용감소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A : 물론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 민영화 과정을 보면 근시안적인 발상이 많은 것 같다. 일단 인원을 줄이고 보자, 그리고 경력사원들의 축적된 노하우같은 것은 간과한 채 임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해고시킨 후 같은 임금으로 더 많은 젊은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Q : 해고된 199명은 생산직인가 아니면 사무직인가?

A : 생산직, 사무직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었다.

Q : 89년 해고자에 대한 대우는 어떠했는가?

A :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불했다. 당시 몇 년 이상 근무한 자는 모두 해고되었다.

Q : 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A : 대법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 위기를 근거로 해고를 인정했다.⁶⁹⁾

Q : 민영화 후에 정부간섭은 없었는가?

A : 없었다.

Q : 민영화 후에 남아있던 종업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은 있었는가?

A : 특별한 향상은 없었으며,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정도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에 약 210세대 정도의 사택을 확보했다.

나. 전 영남화학 노조위원장(민영화 당시 노조위원장)

Q : 민영화 당시의 상황은?

A : 노조는 동부그룹의 인수를 반대했다. 동부그룹이 영남화학을 인수해서 기업을 키울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부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효성그룹에서 인수하기를 바랐다. 5공 말기의 마지막 특혜라는 의혹이 있었다. 30대 재벌의 공기업 인수 조건이 계약 시에 지켜지지 않았다.

Q : 해고 당시 정부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고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없었는가?

69) 이 당시 해고는 대법원에서 정리해고로 판결이 났다. 판결내용은 대법원 1992. 8.14. 선고(92다16973 판결)에 수록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계대계(1996) 참조.

A : 당시 정부가 일정지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은 동부그룹에 있었고, 해고권에 대한 정부 관여는 없었다. 1988년 3월 4일 107명에 대한 1차 해고 발표가 나자 노조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투쟁을 벌였다. 당시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정부는 해고 사태의 여론화를 우려해서 회사에 압력을 가했다. 2차 해고는 1989년 5월 임금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정부나 정치가의 회사에 대한 조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많이 경험했다. 영남화학 노조는 1967년에 설립된 전통있는 노조였으며 7월 15일까지 장기간의 복직 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공권력이 개입하여 파업은 끝나고 말았다. 이 파업의 여파를 수습하는 데에도 11월까지 가야했다. 이 과정에서 영남화학 근로자 700여명 중 해고자뿐만 아니라 민영화 과정에 회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퇴직을 포함해서 절반 가량이 회사를 떠났다.

Q : 민영화 이전에 사전 인사개편 같은 것이 있었는가?

A : 없었다. 회사의 수익성은 좋았다.

Q : 당시 근로자들은 민영화에 반대했는가?

A :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의 우려는 있었다. 건설한 기업에서 인수하기를 바랐다.

Q :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A : 그 문제는 계약서 10조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직업을 보장한다”는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해고가 있는 직후 노조는 상공부에 이 조항에 대하여 따졌는데 당시 상공부는 그 조항은 경영권이 동부화학으로 이전되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역지를 부렸다.

Q : 민영화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는 있었는가?

A : 공식적인 참여는 없었다. 다만 입찰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노조에 접근했다. 노조에서 효성그룹을 선호한 것은 단지 동부가 인수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Q : 민영화 이후 노사관계가 많이 변했는가?

A : 민영화 이전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이 아주 좋았다. 그러나 동부화학이 인수한 후 임금, 복지 등이 크게 낙후됐다. 당시 공단단지 내 노동조합이 있는 17여 개의 회사중 최상의 복지 조건이었으나 지금은 최하위다. 그리고 해고사건 이후 많은 활동가들이 해고되거나 퇴직하여 노동조합이 많이 위축되었다. 현재도 위원장 혼자서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노사관계나 근로자 복지 수준이 많이 낙후됐다.

Q : 동부화학의 경영능력은 어떻다고 보는가?

A : 동부그룹은 제조업 경영능력이 낮으며, 복지수준을 동부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맞추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높은 울산지역의 복지 수준에 비해 떨어지게 됐다.

Q : 민영화 이후 동부화학의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보는가?

A : 생산성 증가는 없다. 민영화는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도 결정되지만 민간기업의 로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민영화할 때 로비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을 키울 수 있는 회사에 팔아야 한다. 인수한 기업도 일정 기한 동안 회사를 파악한 후 문제점을 찾아서 새로운 경영정책을 펴야 하는데 동부그룹은 회사 인수 후 이틀만에 해고자 명단부터 던졌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며 근로자들의 불만을 샀다.

Q : 해고시 생산직, 사무직에 대한 구분이 있었는가?

A : 생산직, 사무직에 대한 구분없이 해고되었다.

Q : 민영화 이후 정부의 개입은 있었는가?

A : 없었다.

이상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영화 이전에 경영합리화나 조직 개편 등의 경영혁신은 없었다. 둘째, 민영화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는 인수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 의사표시 정도에 그쳤다. 셋째, 민영화 이후 기업의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향상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넷째, 민영화 이후 대량 해고가 발생했으며, 복지수준도 상대적으로 저하됐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현재 그 영향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약화된 상태다.

2. 한국비료 (삼성정밀화학)

한국비료는 비료사업 및 일반·정밀 화학사업체로서 1964년 삼성그룹의 자회사로 설립된 후 공기업화되어 1994년 7월에 다시 삼성그룹의 인수로 민영화된 기업이다. 사업장은 경남 울산시 남구 여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12월 현재 종업원 755명에 매출액은 3천백십2억6천4백만원에 달한다. 삼성그룹 내에 사실상 유일하게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체로서 조합원은 약 450명이다.⁷⁰⁾ 한국비료의 인수 기업이 전통적으로 무노조 정책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관련된 노사관계의 변화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다음은 1996년 10월 16일의 삼성정밀화학 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70) 삼성그룹내에 법적인 노조가 있는 회사는 삼성정밀화학외에도 중앙일보, 삼성생명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삼성정밀화학 하나라고 노조위원장은 말한다.

Q : 민영화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A : 민영화직전에 동부그룹의 인수설이 있었다. 노조는 영남화학의 대량해고 경험으로 인해 동부그룹의 인수를 강하게 반대했다. 처음에 노조는 민영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실시하는 민영화정책이 기정사실화되자, 동부그룹에서 인수할 경우 고용불안이 우려되어 동부그룹의 인수를 반대했다.

Q : 처음에는 왜 민영화를 반대했는가?

A : 우리회사는 단일 기업으로 있으면서도 탈비료화하고 정밀화학 방향으로 생산을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또 다품종 소량생산, 자체 기술개발, 독점 품목 개발로 경쟁력이 아주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경쟁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정도의 근로조건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영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Q : 민영화 과정에서 고용이 감소했는가?

A : 아니다. 오히려 조금씩 증가했다.

Q : 민영화를 대비한 조직개편은 있었는가?

A : 조직개편은 없었다.

Q : 민영화후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보는가?

A : 생산성 증가는 없었다고 본다. 회사는 임금, 고가의 기준을 실적에 두었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은 자기가 맡은 일에만 충실하였다.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분위기였으나 삼성의 능력평가제도하에서는 전부가 자기자신의 실적을 높이는데만 급급하였다. 생산방식의 개선에 대한 조언도 그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져야하므로 이전같이 활발하지 않게 되었다.

Q : 민영화 이후 노사관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A : 삼성으로 넘어갈 경우 복지 향상은 기대되었으나, 노동조합의 존립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었다. 삼성에 인수되자마자 근로조건을 삼성그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회사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단체협상 사안을 왜 단체협상 때도 아닌데 요구하냐고 반발했지만 현장 조합원들이 극도로 위축되기 시작했고 조합의 간부들도 이를 걱정하면서 위기위식이 팽배했었다. 특히 회사의 중간 간부진이 더 소극적이어서 삼성의 인수진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회사 사정을 세세하게 너무 많이 알려줄 정도로 협조적인 자세였다. 이것은 중간 간부들이 회사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보여준 것이고, 중간 간부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종업원들에게까지 확산됐다. 이때 회사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삼성그룹과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한다며 교섭을 요청해 왔다. 노조는 여기에 동의를 해줘서 퇴직금 누진제가 없어졌다. 대신 노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타 계열사 진출을 방지한다는 약속을 따냈다. 이 정도로 불안감이 컸다. 그 후에는 사가(회사 휴가) 일수가 삼성그룹에 맞춰 12일이나 축소되었다. 임금하락은 없었다. 그러나 초임은 14만원이나 떨어졌다. 이것도 그룹의 통일이라는 조건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조직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우리는 삼성이 언젠가는 노동조합을 없앨 것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삼성 18만의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노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노력했다. 그러던 가운데 울산지역의 여론이 삼성이 노조를 없앨 것인가에 관심을 보이자 회사측에서도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회사의 간부들은 노조가 버텨야 얼마나 버틸것이나고 생각했고 조합원들도 어렵다고 생각했다. 1995년 10월 내가 노조를 맡기 시작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노동조합을 인정받기 위해, 즉 교섭권을 확보하고 노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내부조직을 감안하여 활동의 수위를 조절하고 노총이

나 언론 등을 비롯해 외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조합이 삼성그룹의 노동조합(활동)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가운데 회사측에서 삼성그룹이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외부로부터 자문도 받고 영남노동연구소에 의뢰도 하면서 4개월 정도 준비하고 공부도 해서 결국 이름만 신인사제도이고 내용은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려고 했다. 당시 조합원들에게 신인사제도가 실시되면 우리는 노예가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조합원들을 결집시켰다. 당시 조직율은 백퍼센트였다. 다급해진 회사측에서는 일대일로 조합원들을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회사측이 다급해지자 이때 우리는 이 기회에 노동조합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자고 생각하고 단체협상 안에 우리의 요구 12가지를 조건으로 제안했다. 이 안에는 타 계열사로 가는 경우 본인의 합의가 없으면 안되도록 할 것,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 본인과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의의 해야 할 것 등 인사 경영권의 요소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위원장 이름의 체육대회 신설, 1박 2일의 노동 조합 간부 교육을 일년에 두 차례 경주에서 실시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인터뷰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한국비료의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이나 고용변동의 문제와 더불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반노조적인 기업에 의한 민영화 인수와 더불어 노사관계의 조건이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변화하면서 노동조합의 위축을 경험했으나, 이후 변화된 조건에 적응하면서 노동조합의 위상을 점차적으로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비료의 민영화 사례에서도 민영화 이전에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는 특정 인수기업에 대한 노조의 반대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3. 대한중석

텅스텐 제품 및 초경합금을 주로 생산하는 대한중석은 1994년 2월 거평그룹이 인수하면서 민영화된 기업이다. 1995년 12월 현재 종업원은 1,021명, 매출액은 천2백3억3천백만원이며 사업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하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대한중석을 인수한 기업이 관련업종의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은 민영화 인수기업의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전망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한중석의 민영화 사례는 일괄 매각 방식의 소유권 이전시 인수기업의 조건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1,021명의 종업원 가운데 노동조합 조합원은 840명이며, 이하의 내용은 1996년 10월 17일 현 노조 위원장과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Q : 민영화 이전에 경영합리화나 조직개편이 실시되었는가?

A : 조직개편이나 합리화는 없었다.

Q : 민영화에 대한 종업원들의 입장은?

A : 종업원의 절반 가량은 반대했지만, 나머지 절반 가량은 민영화가 되면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억제로부터 벗어나 임금이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기대심리로 찬성했다. 그래서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양분되어 있었다. 노동조합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가지지 못했고 따라서 민영화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Q : 민영화 과정에서 퇴직이 발생했는가?

A : 민영화되고 나서 이직률이 좀 높았다. 해고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갔다.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노동조합이 보기에, 대한중석을 인수한 거평그룹이 부동산으로 출발해서 급성장한 기업이고 장기적으로 제조업을 안할 것이라는 생각에, 나중에 쫓겨나가는 것보다 아예

일찍 나가서 정착하겠다는 생각으로 퇴직한 것 같다. 실제로 공장부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었다.

Q : 민영화되면서 고용보장에 대한 조항은 있었는가?

A : 민영화될 때는 고용보장 항목이 없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작년에 고용보장 조항을 단협에 확보했다.

Q : 인수 기업인 거평그룹에서 제조업에 대한 의욕보다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A : 표면상으로는 지금까지 자동화 장비투자는 했다. 그런데 그것과 병행해서 공장부지 안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공정 일부를 용인에 옮기는 등 다른 일도 했다.

Q : 91~92년 사이에 고용이 많이 줄었던데?

A : 강원도 상동 광업소에서 채굴하던 종업원들이 86년부터 줄어왔으며, 92년에 급감한 것은 마지막으로 폐광시키면서 줄은 인원이다.

Q :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는 있었는가?

A :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는 없었다. 다만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이익에 대해 일부를 환원해달라고 산업은행 총재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Q : 민영화 이후에 노사관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A : 민영화 이전에는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생산사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점이 있었는데, 민영화 이후에는 철저하게 노동조합 무용론의 입장이었으며, 노조를 귀찮은 존재로 보았다. 다양한 개인적인 요구는 묵살할 수 있는데 반해 노조를 통하게 되면 목소리가 커지니까 개별적 근로형태를 회사에서 만들

려고 한다. 그래서 노조에 대한 탄압이 상당히 심했다. 조합원이 근무 하던 자리를, 그 사람이 자연퇴직하면 계약직 사원이나 파트 타임 주 부사원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Q : ‘어떤 기업이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던가 하는 인수 기업에 대한 선호 는 있었는가?

A : 대한중석과 관련업종인 기업(현대, 쌍용, 포철 등)이 인수하길 바랐다. 거평에서 인수한다는 점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거평은 제조업 경 험이 없었고 부동산만을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Q : 민영화 이후 근로조건은 어떻게 변했는가?

A : 임금은 다소 상승했다. 민영화 이후 정부 간섭을 더이상 받지 않게 되 니까 임금 인상률이 높아졌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볼 때, 노동강도가 강화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고용불안 심리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이다. 인수 기업이 제조업 경험이 없고, 부동산 사업을 하던 기업이되다 보 니까 기존의 생산체제를 변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소 임금이 올랐지만 노동강도도 강화됐고 고용불안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Q : 고용감소는 발생했는가?

A : 고용감소는 없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이직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 았다. 거평은 제조업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부실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한중석의 간부들이 거평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많이 갔다. 대한중석의 인력을 오히려 활용한 셈이다.

Q : 민영화 이후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점이다. 대한중석의 자산(부동산)가치를 이 용해 거평그룹내 계열사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대한중석을 담보로

무리한 대출을 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Q : 민영화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A : 효율성 증가는 전혀 없다고 본다.

이상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중석의 민영화 과정에서 민영화 이전의 경영합리화나 조직개편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의 참여도 거의 없었다. 둘째, 노동조합측에서는 민영화로 인한 효율성 증가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셋째, 민영화 이후 대량해고나 감원 조치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고용불안 심리가 상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중석 민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점으로, 인수 기업이 관련 제조업 경험이 없고 인수과정에서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대한중석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 그리고 노동조합이 볼 때 인수 희망 기업들 중에서 자본금이나 경영능력 등 인수 조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업이 인수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들의 의혹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조합은 민영화 이후 인수기업이 공장부지에 일반분양 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생산과 무관한 건축,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생산체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성적인 고용불안 심리가 잠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부화학, 한국비료(삼성정밀화학), 대한중석의 민영화 과정과 민영화 이후의 생산성, 고용,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응답자들 모두 민영화 이후 기업의 효율성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했으며 이는 앞서 제시된 실증 분석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둘째, 민영화 이후의 고용 변동을 살펴보면, 동부화학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량해고로 인한 고용감소가 발생했으며 한국비료와 대한중석에서는 고용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생산량과 요소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민영화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민영화 직후 대량해고를 실시한 동부화학의 사례에서 볼 때, 민영화로 인한 고용조정은 그 조건과 절차에 대한 사전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민영화 이후 이들 기업의 노사관계는 공통적으로 악화되었다. 동부화

<표 21> 사례연구 요약

	동부화학	한국비료	대한중석
효율성증가?	없었음.	없었음.	없었음
고용감소?	있었음.	오히려 조금씩 증가.	해고는 아니나 퇴직 및 이직.
해고는 생산직 인가, 사무직인가?	무차별적. 근속년수가 많은 사람을 대상.	-	-
민영화시 고용 승계 조항?	있었으나 정부에서 지키지 않았음.	없었음.	없었으나 후에 단협에 확보.
민영화후 근로 조건?	특별한 향상없음. 악화.	노동강도증가	임금은 상승. 노동강도는 증가.
민영화이전의 경영합리화?	없었음	없었음	없었음
근로자의 반대?	반대하지 않았음. 다만 우려.	노조는 반대 (동부 화학의 경험때문)	절반반대 절반찬성. 공기업 임금가이 드라인에서 해방
민영화과정의 근로자 참여?	회사 선정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실패.	회사선정에 의견 제시 정도	특별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에 환원요구 하였으나 실패.
인수회사에 대한 만족?	불만족.	-	불만족.
인수회사의 경영능력?	없었다고 생각.	-	없었다고 생각.
민영화후의 노사관계?	노동조합활동 위축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대응하여 간신히 버티나감	노조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 안하려고 함.
민영화후의 정부개입?	없음.	없음.	없음.

학의 경우 영남화학을 인수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대량 해고로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조활동의 오랜 경험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남화학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반이 거의 사라졌다. 현재의 노동조합은 영남화학의 민영화와 동시에 합병된 동부석유화학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한국비료의 민영화 역시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낳았다. 민영화 인수 기업인 삼성그룹이 전통적으로 무노조정책을 취해 왔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들은 회사측의 노무관리 방식에 처음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활동은 교섭권의 확보라는 노조 인정으로 그 수위가 낮아졌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타계열사를 기준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사라졌다. 그러나 민영화 직후 위축되었던 노동조합은 이후 내부의 조직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회사측의 ‘신인사제도’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노조의 위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중석의 민영화는 노동조합과 종업원들이 인수기업의 자격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점이 발견된다. 즉, 관련 업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조업 경영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업이 인수했으며, 민영화 인수과정에서도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종업원들은 기업의 장기적 전망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민영화 이후 노동조합을 회피하고 종업원들과의 개별적 관계를 중시하는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중석 뿐만 아니라 동부화학과 한국비료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들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존의 노사관계가 민영화 이후 급속하게 단절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영화된 기업이 기존의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매우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대표의 참여는 이러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종업원들의 입장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⁷¹⁾.

第 6 章

結 論

지금까지 민영화에 대하여 다방면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른 연구와는 달리 민영화의 효율성 측면만을 다루지 않고 공공성, 형평성, 고용 그리고 노사관계 측면을 동시에 다루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민영화 경험의 성·패를 요약하고 최근 완전 혹은 부분 민영화된 공기업의 효율성 및 고용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민영화로 인한 노사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조간부와의 인터뷰 내용도 이 논문에 포함시켰다.

이 논문의 주요 결과 및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민영화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책입안자는 단순히 단기적 효율성만을 생각해서는 안되며 공공성, 공평성, 장기적 효율성, 민영화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에 대한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1)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 것처럼, 노동조합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나 참여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② 이 논문에서 사용된 대우패널자료에 의거하면 우리 나라에서 공공부문의 소득분포가 민간부문의 소득분포보다 더 형평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민영화는 사회전체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정책입안자는 민영화 시 이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③ 민영화의 핵심은 정부정책 혹은 정치상황의 변동으로부터 기업을 차단시키는 것이므로 기업의 소유권은 그대로 정부가 갖고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방식은 민영화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Willig 1993).

④ 민영화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의혹을 없애고 민영화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과정은 투명하여야 하며 또한 공정해야 한다.

⑤ 영국과 프랑스의 민영화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① 민영화 추진의 일관성 ② 시장의 경쟁성 확보 ③ 경영자나 근로자의 참여 ④ 민영화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⑤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이 다.

⑥ 일반적으로 민영화가 공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인식되는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민영화가 반드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① 시장의 경쟁성 확보 실패 ② 정책의 비일관성 ③ 공기업 인수자의 경영능력 미비 ④ 민영화후 지속적인 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민영화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건들의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⑦ 영국과 프랑스의 경험에서 보듯이 민영화는 시장의 경쟁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이러한 경쟁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쟁성이 확보될 때까지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⑧ 민영화는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일반적 견해 또한 이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다.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는 고용감소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반드시 경영합리화차원에서 발생하는 과잉노동의 해소라고는 볼 수 없다. 즉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을 하여 필요 이상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영화 후에는 이러한 과잉노동이 제거될 것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이 연구에서는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① 경쟁적 시장으로부터 오는 경영합리화의 압력 ② 이러한 합리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인수회사의 경영능력 ③ 높은 자본-노동의 대체성 ④ 고용대체적 기술혁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⑨ 사례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민영화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민영화 후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고용불안을 야기시켜 결국 효율성도 증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을 좀 더 엄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인수하는 기업의 경영자가 재정능력은 있지만 그 부문에서 경영능력이 없을 경우는 민영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경제의 경쟁심화, 자유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논리로 공기업의 민영화 혹은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영화 실적은 어떠한가? 1993년말 정부는 약 60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민영화 추진 2년이 지난 지금 16개 공기업의 민영화에 그쳤으며 이 중에서도 완전 민영화된 공기업은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문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분이나 행정규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풍토에서 민영화가 설령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Willig(1993)가 주장하듯이 민영화의 효과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때만 나타나는데 정책의 변동이 매우 심한 한국적 상황에서 민영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매우 작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 논문에서나 기존

의 다른 논문에서 민영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민영화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의 효율성 증대라는 단순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논리는 우선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영화가 가져오는 소득분배효과나 공공성, 형평성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는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의료사업 같은 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민영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민영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시장의 경쟁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제반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잉여는 사회발전을 위하여 재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사례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민영화되는 기업의 근로자들도 무조건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민영화의 효과가 이들 기업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는 민영화 과정에서 이들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결과적으로 민영화 후 인수회사에 대한 불만,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근로의욕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은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이 전기, 의료, 수도, 통신과 같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품에 대한 소비가 제한 혹은 박탈당하는 그러한 사회는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돈이 없어 수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흔히 보고 있다. 만약 민영화가 이러한 소외계층을 더욱 사회에서 소외되게 만든다면 민영화는 결코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가장 많이 민영화의 대상으로 꼽히는 공기업은 담배인삼공사, 한국중

공업, 가스공사이다. 이들에 대한 민영화 계획만 해도 올해 여러 번 바뀌었고 얼마 전에는 이들의 민영화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다. 민영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정책 변동이 문제인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민영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는 국민이나 공기업의 근로자에게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이며, 이러한 정책 변동이 민영화된 후에도 효율성의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이유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선진국들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민간부문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효율성의 증대가 경제나 사회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영화에 있어서도 효율성, 공공성, 형평성 등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먼저 민영화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시장의 경쟁성 확보가 필요하며, 동시에 민영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수되는 공기업의 근로자에게 주식 배당의 우선권을 준다던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장려한다던가, 상한선을 둔 국민주방식을 취한다던가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는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전체 종업원수의 증감만을 따졌는데 앞으로 이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민영화로 인해 근속년수가 많은 사람이 해고, 퇴직, 이직하고 젊은 사원이 입직하여 총근로자수의 변동이 없다고 할 때 본 연구에서는 민영화로 인한 고용감소효과가 없다고 본 것, 둘째, 민영화의 효과는 여성, 남성, 생산직, 사무직에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점을 무시한 것, 셋째, 민영화로 인해 정규직을 임시직으로 교체하는 효과를 무시한 것 등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용을 양적으로만 보았지 질적인 측면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민영화된 기업의 근로자와 이야기하면 고용은 감소하지 않았을지라도 민간기업으로 전환되므로써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비점들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부 록 •

민영화에 관한 ILO와 EEC의 기준

이 부록의 내용은 ILO의 World Labour Report 1995에 실린 민영화에 관한 ILO와 EEC의 기준을 번역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민영화(즉 소유권의 이전)는 고용과 사회보장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 만약, 민영화된 기업이 수익성이 있고 또 관리가 잘 된다면 민영화 이전의 고용과 사회보장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의 전부 혹은 일부 양도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련하여 유럽경제기구 법령(EEC Council Directive, 1977)이 정한 내용이다. 이 법령 제3조는 “기업을 매각하는 자가 갖는 고용계약에서 오는 권리와 의무는 기업을 인수하는 자에게 전달된다”라고 하여 만약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할 경우 이의 만료까지 고용에 관한 조건들은 준수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령 제4조에서는 “기업의 (소유권)이전 그 자체는 해고의 근거가 되서는 않된다. 그러나 경제적, 기술적, 조직적 이유로 해고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민영화(즉 소유권의 이전) 자체가 반드시 고용에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ILO 조약이나 권고는 특별히 소유권 이전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를 다루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해고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ILO 조약 158호(1982)와 권고 166호(1982)는 “사용자에 의한 고용종결”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고용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정당한 해고의 사유는 근로자의

근무성적일 수 있지만, 해고의 주요한 사유는 기업이 처해 있는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 위치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민영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무관할 수도 있다.

ILO 조약158호는 해고시 2 종류의 사회보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 근속년수와 임금에 비례하는 퇴직금
- 실업보험, 노인복지보험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보장급여

가 그것이다. ILO 조약158호는 또한 기업이 처해 있는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 이유에 근거한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용자는

-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의 이유, 해고될 근로자의 종류와 수, 해고실시기간 등에 관하여 늦지않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 해고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은 해고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빨리 근로자대표에게 주어야 한다.

ILO 권고166호는 해고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일련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고용제한, 장기간에 걸친 해고, 내부이동, 재교육, 적정한 보상이 수반된 자발적 조기퇴직, 시간외 근로의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는 또한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에게 재취업 우선권을 줄 것을,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울 것을, 교육기간동안에 소득을 보장하고 재교육 비용이나 직장을 옮겼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민영화 효과분석의 대상기업 및 회사연혁⁷²⁾

1. 대한중석

업종 : 2893 날붙이, 수공구, 일반철물

주요제품 : 텅스텐분말, 초경합금 ,ROLL, 산화텅스텐, 금속텅스텐, 탄화텅스

설립일자 : 1952.09.10

종업원수 : 1,021명

기업규모 : 대기업

공개여부 : 상장 (1962.07.13)

소속그룹 : 거평

가. 주사업 내용

(1) 주사업 내용 (매출액구성비)

- ① 금속제련및가공 (61.70)
- ② 수출입업 (29.60)
- ③ 환경개선 (4.20)
- ④ 건설사업 (4.50)
- ⑤ 의약품사업

(2) 합병내용 : 합병사항 자료 없음 .

72) 한국기업평가원 “기업경영정보”에서 요약, 정리한 것임.

(3) 자산재평가내용				
(단위 : 백만원)				
기준일	장부가액	재평가액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
1995.1.1	7,166	172,814	160,678	4,969
<p>나. 기업체 연혁('86년 이후)</p> <p>88. 11. ROLL 공장 경북 달성에 준공</p> <p>89. 11. WIRE 공장 경북 달성에 준공</p> <p>91. 5. CERAMIC 공장준공</p> <p>92. 3. 23 대한중석광업(주)에서 대한중석(주)로 상호변경</p> <p>92. 6. 상동광산 채굴 중단</p> <p>93. 4. 상동 APT 공장 휴업</p> <p>93. 6. 심벌마크 및 로고 개정</p> <p>94. 2. 28 대주주지분 21.4%</p> <p>94. 2. 28 한국산업은행에서 거평그룹으로 매각</p> <p>94. 3. 산업은행 소유자본 매각(거평그룹)</p> <p>94. 5. 3 대구 연삭공장 준공</p> <p>95. 3. 대구 연삭공장 준공</p> <p>다. 회사현황</p> <p>(1) 영업현황</p> <p>① 영업개황</p> <p>동사의 주요제품은 초경합금공구 등의 초경제품, 텅스텐제품 (WP,WC) 등이며, 부문별로는 초경제품이 39.34%로 가장 높고, 텅스텐 제품이 24.56%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향후 동사는 기존 부문에선 텅스텐제품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이며, 초경합금, 초경공구, 톨홀더, 코티드 인서트 등의 초경제품</p>				

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동사는 향후의 지속성장을 기하기 위해 무역사업의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임.

② 업종 또는 사업부문별 현황

- 텅스텐분말 : 국내에선 당사가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음.
- 초경합금공구 : 당사의 주력부문인 초경합금분야는 현재 40여개의 업체 간 진출해 있으며, 95년 매출액규모로 당사가 업계 1위의 위치에 있음
- 94년도 매출현황

구 분	매 출 실 적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상 품 매 출	28,347백만원	85.36%
제 품 매 출	86,408백만원	23.91%
공 사 수 익	5,412백만원	93.50%
역 무 수 익	163백만원	28.22%

(2) 시장점유율

내수기준 95년말 현재 대한중속(주) 38%, 한국야금(주) 27%, 기타 35%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3) 시장의 특성

초경합금시장의 특성은 자동차, 철강조선, 조립기계, 전자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장경쟁상태는 비교적 낮은 수준임.

(4) 신규사업등의 내용 및 전망

기존초경합금사업은 매출액이익율이 굉장히 높은 고부가가치사업이면서 당사 주력사업이며 아직도 공략할 시장이 많아 94년부터 96년까지(3년간) 총 1,200억원의 시설투자를 계획 추진중임.

2. 엘지금속

업 종 : 2721 비철금속 1 차제련 및 정련

주요제품 : 전기동, 금, 은, 황산, STS 강관

설립일자 : 1936. 06. 15

종업원수 : 1,273명

기업규모 : 대기업

공개여부 : 상장 (1975.12.13)

소속그룹 : 엘지

가. 주사업 내용

(1) 주사업내용 (매출액구성비)

- ①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채광, 매광, 제련 및 판매 (88.25)
- ② 금속 및 비금속의 합금 및 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 (6.10)
- ③ 화학공업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5.65)
- ④ 독극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

(2) 합병내용

1943. 11. 삼성광업에 양도

1982. 7. 온산동제련(주)를 흡수합병

(3) 자산재평가내용

(단위 : 백만원)

기준일	장부가액	재평가액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	기 타
1993.1.1	41,056	117,148	54,770	1,799	19,523

나. 기업채 연혁('86년 이후)

- 86. 6. 7,563,685,000원 유상증자
- 86. 12. 외국인 투자기업 (OKO) 주식매각 (448,420 주)
- 88. 12. 온산동제련 5만톤 증설공사 준공
- 89. 7. 주식회사리키금속으로 상호변경
- 89. 11. 고순도 황산공장 신설
- 89. 12. 무산소동공장 신설
- 89. 12. 스테인리스공장 증설
- 89. 12. 무수황산공장 증설
- 90. 1. 이산화티타늄 안료 제조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
- 91. 8. 스테인레스 파이프 JIS 승인획득
- 92. 12. 무수황산/아황산 공장증설
- 93. 2. 자산재평가
- 93. 10. LPB 기술도입 승인
- 94. 12. 귀금속공장 합리화 투자
- 95. 3. 주식회사 LG금속으로 상호변경

다. 회사현황

(1) 영업현황

① 영업개황

주력제품인 전기동의 시세형성시장인 LME의 재고감소로 전기동의 LME 가격이 전기보다 상승하는 등의 시장상황의 지속적인 원화절상, 주요제품의 판매실적 호조로 당해년도 발기 수익은 크게 개선됨.

② 업종 또는 사업부문별 현황

구 분	년 도	제련사업부	동가공사업부	STS사업부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93년	102.3%(7,536)	322.8%(184)	134.7%(194)
	94년	125.8%(9,478)	180.9%(333)	135.1%(262)
	95 반기	146.7%(6,512)	200.0%(260)	163.5%(188)
순이익 증가율 (순이익액)	93년	47.9% (58)	-169.7%(-30)	-146.5%(-23)
	94년	186.2% (108)	-110.0%(-27)	165.2% (15)
	95반기	481.0% (277)	181.2% (13)	46.1% (6)

(2) 시장점유율

	1995 상반기	1994년	1993년
전기동	93%	95%	98%
금	60%	60%	60%
은	40%	40%	40%
황산	16%	16%	16%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제품 SEGMENT 별 시장구분은 제련과 가공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제련부문은 내수시장에서는 국내간 경쟁은 없으나, 최근 삼성물산의 시장진입으로 경쟁이 예상되고 가공부문은 한때 국내업체간 과잉투자로 초과공급상태였으나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적정수준의 경쟁상태에 진입한 단계임.

3. 동부화학

업 종 : 241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

주요제품 : STYRENE MONOMER, POLY STYRENE, EXPANDABLE
PPLY, 복합비료, 질산

설립일자 : 1973. 6. 26

종업원수 : 678명

기업규모 : 대기업

소속그룹 : 동부

가. 주사업 내용

(1) 주사업내용 (매출액구성비)

- ① 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원료의 제조 및 가공 (58.20)
- ② 화학비료제조의 신제품개발 및 비료효과검정을 위한 시범포설치 및 운영 (22.10)
- ③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업 (11.20)
- ④ 기타화학공업품의 제조 및 가공 (4.90)
- ⑤ 액체화물운송업 및 보관업 (.30)

(2) 합병내용 : 1990. 6. 7 영남화학주식회사를 흡수합병.

(3) 자산재평가내용 : 자산재평가 자료 없음 .

나. 기업체 연혁('86년 이후)

86. 7. 29 주주변경 (한국비료 - 김준기)
86. 8. 1 차관원리금 상환 완료
86. 9. 5 상호변경 (울산석유화학공업(주)-동부석유화학(주))
87. 7. 22 PS기술도입계약신고 (프)ATOCHEM社 (FF9,500,000) : 10년
88. 5. 제3차 SM 용량증대 (90,000톤/년 - 108,000톤/년)
88. 12. 5 PS 공장 준공
89. 9. 7 재평가적립금 10,972 백만원 자본 전입
89. 11. 3 공모주 6,635,000백만원 자본 전입
90. 3. 상호변경 (동부석유화학(주)-동부화학(주))

90. 6. 7 영남화학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90. 6. 7 자본금 221억에서 271억으로 증액
 92. 12. 질산 EPS 공장준공
 95. 3. (주)한농 출자

다. 회사현황

(1) 영업현황

① 영업개황

당사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연산 6만톤 규모의 SM공장을 1978년에 준공한 이래 꾸준한 공정개선과 생산성향상을 통해 원가절감 및 품질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높은 국제가격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SM을 국내 수요업체에 공급하여 왔음. 그리고 보다 높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직계열화에 대한 투자를 87년부터 실시, 현재 SM 21만톤, PS 9만톤, EPS 4만 5천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② 업종 또는 사업부문별 현황

석유화학부문의 SM 및 PS부문은 94년 하반기부터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EPS부문은 93년이후 판매안정화 기반구축에 힘써온 바 점유율확보에 따른 수익개선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소형업체 위주 안정적인 영업으로 부실채권 예방에 상당히 기여하였습니다.

비료부문에서는 국내 최대 민간비료회사인 당사는 민영화이후 영업력을 대폭 강화에 힘써왔으며 공해방지, 에너지절감, 생산성향상을 위한 황산, 인산 공정개선 사업과 복합비료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저인산 복비등의 신비종개발에 성공, 국내 최고수준의 복합비료 생산업체로의 성장기반을 착실하게 닦아가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SM은 현재 당사를 비롯하여 대림산업, 럭키, 유공아코화학,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등 총 6 개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내수의 당사 점유율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S시장은 미원유화, 효성바스프, 럭키, 제일모직, 신아 및 당사 등 6개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14%입니다. 복합비료는 '95년 내수시장에 다시 참여하여 2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SM, PS 등 유화산업은 94년 하반기부터의 가격상승으로 구조적인 공급과잉상태를 탈피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복합비료의 국내 수요는 년 100만톤에 이르는 농민의 필수 영농자재로서 연간 수용량을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함. 따라서 영농 성수기에 대비한 재고 확보 등으로 연중 생산 공급하여야 하며, 잉여물량은 동남아 주요 농업국인 태국,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사택부지를 이용한 사업으로 동부건설을 통해 아파트단지 건설추진, 총 1,500여세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95년 하반기부터는 석고보드 영업등의 신규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임. 또한 2000년대 종합화학회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정밀화학분야 등 여러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 한국외환은행

업 종 : 6512 국내은행

설립일자 : 1967. 1. 30

종업원수 : 8,449명

기업규모 : 대기업

소속그룹 : 한국외환은행

가. 주사업 내용

(1) 주사업 내용(매출액 구성비)

- 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70.40)
- ② 외국환 업무(5.60)
-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기타 경영업무(6.60)
- ④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8.40)
- ⑤ 한국외환은행법 폐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업무(9.00)

(2) 합병내용 : 합병사항 자료 없음

(3) 자산재평가내용

(단위 : 백만원)

기준일	장부가액	재평가액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
1993.1.1	190,022	560,752	365,169	5,561

나. 기업체 연혁('86년 이후)

- 89. 12. 30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한 한국외환은행에서 상법상의 (주) 한국외환은행으로 전환
- 90. 7. 9 종합전산시스템 가동
- 91. 12. 5 자본금 6,050억원 (일반공모로 2,000억원 증자)
- 91. 12. 5 자본금 2,000억원 증자
- 92. 10. 26 우수저축기관상 수상
- 93. 1. 1 자산재평가 실시
- 93. 12. 원화수신 월평균잔액 10조원 돌파

- 93. 12. 총인원 8,142. 지점수 301
- 94. 4. 4 주권상장 (증권거래소)
- 94. 8. 30 '97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공인은행 지정
- 94. 12. 원화수신 월평균잔액 14조원 돌파

다. 회사현황

(1) 영업현황

① 영업개황

격심한 외부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발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수 있도록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선진 외국은행수준으로 키워나갈수 있도록 '96년도 경영목표를 "영업기반 확충, 경쟁력 강화"로 정하여 업무추진에 매진중임 .

② 업종 또는 사업부문별 현황

- '95년 12월 총가용수신 평잔이 전년대비 5조원 이상 증가한 19조원을 넘어섰으며, 총가용수신 증가율은 경쟁시은중 수위를 차지함.
- 수출입 실적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406억불, 외환부문에서도 전년대비 33% 이상 증가한 318억불을 실현하여 수위의 자리를 확고히하고 있음.
- '95년도 영업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업무이익은 4,134억원, 당기순이익은 1,053억원을 달성하였고, 주식매매의 차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한 경상업무이익은 3,914억원으로 경쟁시은중 수위를 차지함.

(2) 시장점유율

구 분	점 유 율	지 위	비 고
총수신(신탁)	13.2%(16.6%)	5(4)	5대 시은 대비
원화대출금(신탁)	13.7%(13.1%)	6(6)	
수출입	23.1%		1

원화기준, 수출입은 누계 기준

(3) 시장특성

자유화, 국제화, 개방화 등 자율경쟁의 추진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업무영역 확대 및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5. 한외종합금융

업 종 : 65931 종합금융업

설립일자 : 1979. 5. 28

종업원수 : 144명

기업규모 : 대기업

공개여부 : 상장(1989. 9. 9)

소속그룹 : 한국외환은행

가. 주사업 내용

(1) 주사업내용 (매출액구성비)

- ① 자금조달, 유가증권(5.40)
- ② 유가증권의인수와모집 또는 매출의주선, 사채발행등(27.90)
- ③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무(8.60)
- ④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리스업무(42.50)
- ⑤ 외국환업무및 외자의차입업무(15.60)

(2) 합병내용 : 합병사항 자료 없음 .

(3) 자산재평가내용 : 자산재평가 자료 없음 .

나. 기업체 연혁('86년 이후)

87. 5. 4 사무실 이전 (현재의 내외빌딩)

89. 6. 8	주식 액면분할 (1 주당 금액 오천원)
89. 8. 12	65억원 유상신주 공모로 공개후 자본금 215억으로 증가
89. 9. 9	당사 주권 증권거래소 신규상장
92. 6. 15	사무실 이전 (영풍빌딩)
95. 3. 29	홍콩현지법인 설립 (당사 100% 출자)
95. 9. 27	강남지점 설치 (강남구 삼성동 동신빌딩내)
96. 6. 10	본사사옥 입주

다. 회사 현황

(1) 영업현황

① 영업개황

1979년 9월 설립당시는 어려웠던 국내상황으로 영업기반의 구축이 어려웠으나 내실있는 경영과 내부유보로 인한 영업재원의 확충, 국제금융분야에서의 영업활동 치중 등으로 1996.3월말 현재 총자산은 27,776억원으로 전기대비 30%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6.6% 증가한 274억원으로 업계 3위를 실현하였음.

② 업종 또는 사업부문별 현황

- 자금부문

실물경기 활황국면의 진정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감소와 정부의 신축적 통화관리 등에 의한 단기금리의 하향추세속에 자금의 조달과 운용의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

- 금융부문

자금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기업의 자금수요 감소로 인한 예대마진의 축소와 영업신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나, TOTAL MARKETING 의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각 부문 양호한 영업신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특히, 서울소재 단자사의 종금전환에 대비하여 회사채 지급보증 및 주선, 증장기대출 업무신장에 주력해 오고 있음.

- 수신영업부문

실세금리의 급락, 금융기관간 치열한 경쟁 금융 소득과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수신금리 경쟁력 강화, 그리고 강남지점설치로 인한 영업활성화를 통해 CMA, 수익증권 등 전반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금융부문

국내외화대출 부문에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저리용자를 확대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동남아지역, 중남미지역 및 OECD 국가 등에 대한 역외외화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외화자산구성을 다양화하고 투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누자수익률이 높은 외화증권투자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외화자금부문

신규 전환종금사의 조달시장 진입과 JAPAN PREMIUM으로 표현되는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신용도 저하로 신규차입이 어려워지고 조달코스트가 높아지고 있으나 당사는 업계수위의 외화차입잔액을 기록, 유지하고 있음.

- 리스부문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차입규제 조치와 함께 대출의무비율을 리스에도 적용시킨후 리스시장은 상당히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전환종금사와 전업리스사의 거래선 유지를 위한 지속적 가격 경쟁으로 어려운 시장환경속에서 보낸 한해였음. 경기성장세의 둔화와 추가적인 투금사의 종금 전환, 그리고 96.8.18일부터 50%로 강화될 중소기업의무지원비율로 영업신장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금융부문

당사의 기업금융업무는 해외투자주선 및 인수자금지원, M & A 주선 및 전략 수입, 외국인합작투자 주선, PROJECT FINANCING, 기업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취급되고 있음. 특히 1997년 증권거래법 22조의 폐지를 앞두고 공개매수제외와 기업탈취, M & A 업무는 당사의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수수료수입업무의 신규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FY 1993	FY 1994	FY 1995
총 자산			
종금사합계	88,109	153,379	218,162
한외종금	16,514	21,436	27,776
점 유 율	18.7%	14.0%	12.7%
영업수익			
종금사합계	13,281	17,344	24,929
한외종금	2,197	2,552	2,991
점 유 율	16.5%	14.7%	12.0%
당기순이익			
종금사합계	1,180	1,594	1,944
한외종금	200	257	274
점 유 율	16.9%	16.1%	14.1%

(3) 시장의 특성

종합금융업은 여타 전업금융기관업무와 달리 겸업업체를 지닌 독특한 시장구조를 구축하여 업무다양화를 통한 위험의 분산과 유연한 환경대처능력의 특성을 보임. 현재까지는 중규모금융기관으로서 도매금융에 치중하여 왔는데

각 업무분야에서 전업사들에 비하여 규모와 영업규제면에서 불리한 실정인 것이어서 향후 각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업계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의 영업활동은 종합금융회사의 설립취지에 부응하여 외화조달 및 대출 등에 타사를 월등히 앞서가고 있으며 현재의 단자, 증권, 투자신탁, 국제금융, 리스업무에 점차적으로 기업금융 용역과 국제금융분야로 업무용역을 확대, 발전시킬 예정이며 특히 "시간을 사는 전략"으로 불리는 M&A(기업의 합병과 인수) 등과 같은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

6.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업 종 : 742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기술서비스업

주요제품 : 기술용역사업

설립일자 : 1963.03.09

종업원수 : 694명

기업규모 : 대기업

가. 주사업내용 (매출액구성비)

(1) 기술용역, 설계감리, 기술용역연구, 측량, 토목건축공사

(2) 합병내용

66. 8. 호남엔지니어링 합병

66. 9. 김수근 건축연구소 합병

68. 9. 미림기술공단 흡수합병

94. 5. 13 공기업 민영화로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경영권인수				
(3) 자산재평가내용				
(단위 : 백만원)				
기준일	장부가액	재평가액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
1986. 1. 1			712	22
<p>나. 기업체 연혁('86년 이후)</p> <p>86. 9. 대통령 단체표창 (한강종합개발사업) 수상</p> <p>86. 10. 신사옥 매입이전 (강남구 신사동 643-22)</p> <p>88. 12. 현 대표이사 사장 홍은표 취임</p> <p>89. 1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토목 전면책임 감리업체로 등록</p> <p>90. 2.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환경처)</p> <p>90. 8. 부설 환경관리기술연구소 설립. 등록 (과학기술처)</p> <p>91. 2. 2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 등록 (소음진동. 수질. 대기)</p> <p>94. 5. 13 공기업 민영화로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경영권 인수</p> <p>95. 8.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취득</p>				
<p>다. 회사현황</p> <p>(1) 영업현황</p> <p>당사는 수주활동 강화로 91년 269억, 92년 326억으로 매출증가를 시현하였으며, 93년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부진등으로 매출액이 313억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당사는 서비스시장 개방화 추세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 모든 분야의 사업제안서 패키지화 추진, 해외선진우수업체와의 상호보완적 콘소시엄 입찰참여를 위한 지속적 기술협력 방안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수주활동강화와 비</p>				

용절감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2) 시장점유율

	'93사업년도	'92사업년도	비고
(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1.41%	1.41%	
(주) 유신설계공단	1.25%	1.13%	
(주) 삼한건설기술공사	1.12%	1.02%	
(주) 도화종합기술공사	1.21%	1.44%	

(3) 시장의 특성

기술용역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왔으나 기술용역업에 대한 신규진입완화 입찰제도면에서의 사전자격심사(PQ)의 실시 등으로 수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상승으로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특히,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잠식이 예상되므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 현안이 되고 있음.

(4) 신규사업등의 내용 및 전망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와 환경관련 산업의 성장등으로 지속적인 매출신장등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치열한 수주경쟁과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확보가 관건이라 하겠다.

7. 한국이동통신

업 종 : 64 우편, 전기통신업

주요제품 : 통신설비(땅), 통신설비(땅)

설립일자 : 1984.03.29

종업원수 : 2,988명

기업규모 : 대기업

공개여부 : 상장(1989.11.07)

가. 주사업 내용

(1) 주사업내용 (매출액구성비)

- ① 이동전화 (64.10)
- ② 무선호출 (39.90)

(2) 합병내용 : 합병사항 자료 없음 .

(3) 자산재평가내용 : 자산재평가 자료 없음 .

나. 기업체 연혁('86년 이후)

- 86. 3. 1 부산지역 무선호출 서비스 개시
- 86. 6. 2 사옥이전 (성동구 구의동 -> 서초구 방배동)
- 86. 10. 20 대구, 대전, 광주지역 무선호출 서비스 개시
- 87. 4. 15 인천지역 무선호출 서비스 개시
- 87. 9. 1 전주지역 무선호출 서비스 개시
- 88. 4. 30 공중전기통신 사업자 지정
- 88. 5. 13 한국이동통신 (주)로 상호변경
- 88. 6. 1 공중전기통신 사업자로 업무개시
- 88. 7. 1 서울지역 휴대전화 개통
- 88. 7. 17 본사사옥 이전 (서초구 방배동 -> 마포구 도화동)
- 88. 8. 1 춘천, 제주지역 무선호출 서비스 개시
- 88. 9. 5 부산지역 차량전화, 휴대전화 개통
- 88. 12. 28 무선호출 10만 가입자 돌파 기념행사 개최
- 89. 2. 1 대구, 대전, 광주지역 차량전화, 휴대전화 개통

89. 10. 12 기업공개
 89. 11. 7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
 89. 12. 31 지방 14개 사업소 개설 (성남, 안양, 부천, 마산, 울산, 포항, 안동, 목포, 순천, 천안, 군산, 강릉, 원주)
 91. 12. 14 이동통신 가입자 100만명 돌파
 94. 7. 7 "부회장", "기획조정전무" 신설 및 해외사업, 부동산임대업
 94. 7. 7 사업목적 추가 _ 임시주총
 95. 6. 무선호출 터미널 TDX 설치
 95. 6. 이동전화 교환기 구로 APX 외 5곳 설치

다. 회사현황

(1) 영업현황

당사는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1984.3.29 창사이래 동 서비스를 독점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93년 하반기부터 무선호출분야에서 전국의 10개지역사업자와 경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이동전화분야에서는 '96년 4월부터 경쟁에 돌입할 예정임. 이동통신사업은 자체 통신망(교환기, 기지국등)을 설치한 후, 이통신망을 이용할 가입자를 신청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형태로써 자기통신망을 이용할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영업활동이 됨

(2) 업종 또는 사업부문별 현황

(단위 : 회선, 명, 백만원)

구 분	이동전화		무선호출	
	'94	'95	'94	'95
시설능력 (회선)	1,755,000	2,450,000	7,000,000	11,000,000
가입자수 (명)	960,258	1,641,293	3,758,586	5,331,420
매 출 액 (백만원)	461,207	847,742	321,729	474,798
설비보증금(백만원)	622,814	1,064,236	120,029	151,595

(3) 시장점유율 (가입자수 기준)

(단위 : %)

구 분	'92	'93	'94	'95
이동전화	100	100	100	100
무선호출	100	85.8	59.1	55.2

(4) 시장의 특성

이동전화의 경우는 특히 단말기의 가격이 수요증가에 중요한 요소인데,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동전화 서비스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음.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① CDMA 이동전화 서비스

- '94년 CDMA 디지털 기술 국책사업으로 선정
- '94년 11월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시험통화 성공
- '96년 1월 세계 최초로 인천, 부천지역을 대상으로 CDMA 상용서비스 제공
- '96년 4월 수도권, 대전지역 서비스에 이어 '96년 말까지 부산, 대구, 광주지역으로 서비스지역을 확대하여 CDMA 서비스에 대한 완벽한 기술력확보 및 운용 노하우를 획득함으로써 CDMA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게 됨.

② PCS 사업

PCS 사업의 참여를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의 경과는 아래와 같음.

- '94년 3월 PCS 개발 추진 계획 수립
- '94년 7월 PCS 시스템 규격 작성 및 개발 착수
- '94년 12월 PCS 연구용 시스템 개발 완료
- '94년 2월 정보통신부로부터 PCS 시험용 주파수 사용 승인
- '95년 5월 PCS 핵심칩 (KMT CDMA PCS 1.0) 개발완료로 국내

기술 자립기반 구축

- '95년 12월 PCS 국내 최초시험통화 성공

* 위성이동통신 서비스 사업

모토로라사가 주관하고 있는 저궤도위성 통신서비스사업으로 '95년 3월 이리덱코리아(주)를 설립하고 '97 년까지 한국에 관문국 건설하여, '98년 상용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96년 2월 12일 4.4%의 지분(\$70mil) 투자를 완료하였음.

* 무선데이터 사업

* 해외사업

- 인도 무선폭출 사업

인도의10개도시에서 무선폭출사업의 허가를 받고 1995년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사업으로 29.5%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음.

- 필리핀 종합정보통신사업자인 INFORCOM사 지분 참여
- 미국 PCS사업 진출
- 중국 무선통신사업 진출

8. 한국비료(삼성정밀화학)

업 종 : 2412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

주요제품 : 요소, 멜라민, 디멜틴포름, 염화메탄, 가성소다, 기기제작

설립일자 : 1964. 8. 27

종업원수 : 755명

기업규모 : 대기업

공개여부 : 상장 (1976. 4. 15)

소속그룹 : 삼성

가. 주사업 내용

(1) 주사업내용 (매출액구성비)

- ① 전각호의 사업에관한 물품의 매매및수출입업등 (34.53)
- ② 전각호에 관련되는 각종화학공업품의 제조및가공 (25.43)
- ③ 화료비료및동부산물의제조및가공 (17.30)
- ④ 기계기구, 주제품, 단강품, 철강재의 제조 및 가공등 (8.23)
- ⑤ 기타 화학제품및동부산물의 제조및가공 (14.51)

(2) 합병내용 : 합병사항 자료 없음

(3) 자산재평가내용 : 자산재평가 자료 없음 .

나. 기업체 연혁('86년 이후)

- 87. 6. 17 DEM, DMM공장 준공
- 89. 3. 21 8대 대표이사 사장 유경중씨 취임
- 89. 3. 21 수권자본 200 억원으로 주총의결
- 89. 11. 24 프프털알콜공장 준공
- 89. 11. 24 푸르푸털 알코올공장 준공
- 90. 8. 21 TANK TERMINAL 준공
- 91. 3. 22 환경설비사업 진출
- 91. 11. 7 염화메탄공장 준공
- 92. 8. 25 소다음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공장 준공
- 93. 4. 27 대덕중앙연구소 준공
- 94. 3. 31 전해공장, EDA,MC/HPMC,METAC/ATAC,BARBITORIC
ACID 공장준공
- 94. 8. 1 대주주 1인 변경 (제일모직)

- 94. 11. 4 한국비료공업 (주)에서 삼성정밀화학 (주)로 상호변경
- 94. 12. 29 일본 TOKUYAMA CORP.와 합작회사 설립계약 체결
- 95. 3. 7 9대 대표이사 이승용씨 취임
- 95. 4. 1 합작사 설립
- 95. 11. 27 반도체 현상액 공장 준공
- 95. 12. MA.DMF 제2공장 준공
- 95. 12. 5 제2 열병합발전소 준공

다. 회사현황

(1) 영업현황

지난한해 국제적으로는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체제를 대신한 WTO(세계무역기구)가 정식 출범하면서 강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였는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렸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과거 청산과 개혁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좋은 기회로 반전될수 있듯이 이러한 일들을 거울 삼아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켜 나가는 국민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됨. 지난해 당사는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 2000년대를 향한 위상을 정립했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DMF, HPMC 등 증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새로운 사업분야의 진입을 위해서 전자공업약품, 다이케텐 등의 사업을 착수한 바 있으며, 지속전인 성장발판을 마련키 위해 환경안전, 물류, 정보시스템 등 경영인프라를 구축을 해왔으며 의식개혁과 삼성 신경영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회사 나름대로의 3불3변 운동, FINE운동 등을 추진하여 정착단계에 와 있음.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체제구축을 위해서 대리점 초청행사와 기술세미나 등 많은 노력을 기우려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함은 물론 세계시장을 향한 발판을 하나 하나 마련해 가고 있음.

① 비료사업

1967년 공장가동에서부터 80년초까지 당사 주공사업분야로서 성장하여 오늘날 국제적 중견기업으로서 발돋움할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던 비료사업분야는 비료시장의 공급과잉에 따른 비료가격의 하락과 비료 자유판매제 실시 및 주원료인 납사가격의 폭등으로 여러차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에너지절약 및 원단위향상을 위한 공정의 개선과 열병합발전설비 및 원료대체사업 등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음. 또한 WTO체제하에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고 점진적인 경지면적의 감소로 국내농요시장의 수요감소가 예측되어 단계별 탈비료화사업의 완전정착화와 생산구조조정과 함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과 기초소재의 확보, 그리고 품질경영의 추진등으로 새로운 기업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② 일반화학사업

비료사업분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영속 기업으로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사업개발에 치중한 결과 기존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회사수익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암모니아, 멜라민, 메치렌크로라이드, 클로로포름, 염소, 가성소다 등을 생산하여 석유화학 기초분야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신제품개발을 통한 제품의 다양화에 더욱 노력할 것임.

③ 정밀화학사업

'80년대후반부터 당사 주중사업분야로 위치를 확고히한 정밀화학사업은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오랜 비료공장의 운영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산업 제품개발에 꾸준히 노력해온 결실로서 독점제품인 메틸아민, 개미산, 푸르푸릴알코올, 염화메탄, 셀루로스유도체, 에틸렌아민류, 수처리응집제류, 바비튜릭산, PCM 등 정밀화학제품을 생산하므로써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국내정밀화학공업발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최대 활용 DMF, HPMC 염화메탄등 기존제품의 증산추진과 기술패권주의의 세계적 조류에 대응키위해 중앙연구소 연구요원 확충을 통하여 정밀화학사

업분야의 기초 연구를 집중육성하고 신규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종합화학공장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

④ 기기제작사업 및 환경사업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화학기기 장치산업에 참여해온 당사는 그동안 축적된 자체기술과 세계유수의 화학기기 전문업체와 기술제휴로 반응기, 탭조류, 구형탱크, 열교환기, 압력용기, 초저온기기, 이중탱크 및 가열기 등을 제작하므로써 국내판매는 물론 동남아와 중동지역에 수출하여 기기제작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환경설비사업분야까지 그영역을 확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 유해물질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산업폐수처리시설등을 제작공급하고 있음. 특히 신에너지사업에도 진출하여 경제적인 잠열축열식 빙축열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⑤ 상품수출입 사업

회사가 위치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 저장탱크의 증설과 보유하고 있는 각종설비 및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로부터 암모니아, 메타놀, 부타놀,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등 상품을 수입, 판매하므로써 영업활동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TANK TERMINAL 사업 등 판매전략을 다양화하여 매출신장 및 이익증대를 기해 나가고 있음. 아울러 수입개방화와 국제적 흐름에 맞게 기존의 화학제품에서 일반상품에 이르기까지 무역종목과 구조의 다양화를 기해 나갈 것임.

(2) 시장점유율

당사의 매출신장율은 '93년 10.7%, '94년 11.1%, '95년 32.4%로 계속 성장추세에 있으며 주요제품의 시장점유율에 있어서도 농업용요소 40%, 공업용요소 60%, 메라민 90%, 암모니아 70%, DMF 90%로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3) 시장의 특성

산업용 중간원료인 제품,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석유화학, 의약, 농약등 화학 제조업의 원료로 공급되고 있음. 내수 및 수출의 구성비는 현재 76 : 24로서 내수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나 앞으로는 수출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그동안 지속적인 탈비료화와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정밀화학제품을 개발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기술패권주의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체 독자적 기술을 통한 정밀화학사업분야의 기초연구와 함께 울산의 생산기술연구소를 통한 지속적인 신규사업추진으로 종합화학공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임.

《정부의 주식소유 현황 및 민영화 비율》

(단위 : %)

		1991	1992	1993	1994	1995
한국 비료	정부소유	산업은행(34.6)	산업은행(34.6)	산업은행(34.5)		
	민간소유	65.4	65.4	65.5	100	100
대한 중석	정부소유	한국감정원(1.6) 산업은행(21.4)	한국감정원(1.6) 산업은행(21.4)	한국감정원(1.6) 산업은행(21.4)		
	민간소유	77.0	77.0	77.0	100	100
한국 종합 기술 개발 공사	정부소유	산업은행(50.0) 주택공사(6.8) 도로공사(6.6) 수자원공사(6.6) 석탄공사(0.6)	산업은행(50.0) 주택공사(6.8) 도로공사(6.6) 수자원공사(6.6) 석탄공사(0.6)	산업은행(50.0) 주택공사(6.8) 도로공사(6.6) 수자원공사(6.6) 석탄공사(0.6)		
	민간소유	29.4	29.4	29.4	100	100
한국 이동 통신	정부소유	한국통신(65.1)	한국통신(64.0)	한국통신(64.0)	한국통신(20.0)	한국통신(19.3)
	민간소유	34.9	36.0	36.0	80.0	80.7
동부 화학 (주)	정부소유	산업은행(19.6) 한국비료(9.2)	산업은행(17.8) 한국비료(9.2)	산업은행(12.9) 한국비료(4.4)		
	민간소유	71.2	73.0	82.7	100	100
LG 금속	정부소유	중앙기금(5.1) 산업은행(14.3)	중앙기금(5.1) 대한투신(3.0)	중앙기금(5.1) 산업은행(13.9)	중앙기금(3.7) 기업은행(5.3)	중앙기금(4.8) 기업은행(2.6) 중소기업 신탁(2.6)
	민간소유	80.6	80.6	81.0	91.0	90.0
한외 종합 금융 (주)	정부소유	외환은행(31.4) 산업은행(3.5)	외환은행(31.3) 산업은행(3.4)	외환은행(44.9)	외환은행(33.8)	외환은행(33.9)
	민간소유	65.1	65.3	55.1	66.2	66.1
한국 외환 은행	정부소유	한국은행(65.3) 재무부(1.7) *증자*	한국은행(65.3) 재무부(1.7)	한국은행(65.3) 재무부(1.7)	한국은행(65.2)	한국은행(47.8)
	민간소유	33.0	33.0	33.0	34.8	52.2

		1986	1987	1988	1989	1990
한국 비료	정부소유	산업은행(35.0)	산업은행(35.0)	산업은행(35.0)	산업은행(35.0)	산업은행(35.0)
	민간소유	65.0	65.0	65.0	65.0	65.0
대한 중석	정부소유	산업은행(14.5)	산업은행(21.4)	한국감정원 (1.6)	한국감정원 (1.6)	한국감정원 (1.6)
		한국증권대체 결제(21.5)	한국증권대체 결제(39.0)	산업은행(21.4)	산업은행(21.4)	산업은행(21.4)
	민간소유	45.1	27.7	64.8	77.0	77.0
한국 종합 기술 개발 공사	정부소유	산업은행(50.0)	산업은행(50.0)	산업은행(50.0)	산업은행(50.0)	산업은행(50.0)
		주택공사(6.8)	주택공사(6.8)	주택공사(6.8)	주택공사(6.8)	주택공사(6.8)
	민간소유	29.4	29.4	29.4	29.4	29.4
한국 이동 통신	정부소유	한국통신(100)	한국통신(100)	한국통신(100)	한국통신(68.0) *기업공개*	한국통신(65.1) 증안기금(1.4)
	민간소유	0	0	0	32.0	34.9
동부 화학 (주)	정부소유	한국종합화학 공업(50%) 한국비료(25%)	한국종합화학 공업(50%) 한국비료(25%)	한국비료(25%)	산업은행(25.7)	산업은행(20.9) 한국비료(9.3)
	민간소유	25.0	25.0	75.0	74.3	69.8
LG 금속	정부소유	산업은행(16.7)	산업은행(16.7)	산업은행(15.7)	산업은행(15.7)	산업은행(15.7)
	민간소유	83.3	83.3	84.3	84.3	84.3
한외 종합 금융 (주)	정부소유	외환은행(45.0) 산업은행(5.0)	외환은행(45.0) 산업은행(5.0)	외환은행(45.0) 산업은행(5.0)	외환은행(45.0) 산업은행(5.0)	외환은행(31.4) 산업은행(3.5)
	민간소유	50.0	50.0	50.0	50.0	65.1
한국 외환 은행	정부소유	한국은행(97.5) 재무부(2.5)	한국은행(97.5) 재무부(2.5)	한국은행(97.5) 재무부(2.5)	한국은행(97.5) 재무부(2.5)	한국은행(97.5) 재무부(2.5)
	민간소유	0	0	0	0	0

<부록 표 1>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생산성					
(1인당 매출액, 백만원, 1990년 기준 ⁷²⁾)					
기 업 명	1986	1987	1988	1989	1990
한국비료	173.62	204.43	225.45	219.77	240.93
대한중석	26.05	26.58	26.46	26.52	27.93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20.44	24.51	22.36	31.81	41.58
동부화학(주)	172.10	165.17	161.44 (민영화)	151.36	250.90
한국이동통신	16.04	9.11	45.77	77.50	91.39
LG금속	277.74	330.72	382.94	356.31	377.71
한외종합금융	498.72	472.10	780.98	1,057.73	1,137.37
한국의환은행	185.99	178.97	178.10	191.98	181.28
기 업 명	1991	1992	1993	1994	1995
한국비료	257.23	248.64	254.26	268.53 (민영화)	299.60
대한중석	33.84	54.19	53.00	55.36 (민영화)	86.31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36.21	38.15	37.77	35.81 (민영화)	41.17
동부화학(주)	221.32	210.20	291.58	273.98	340.87
한국이동통신	110.84	138.28	176.34	272.39	325.44
LG금속	386.79	442.56	509.20	641.29	795.35
한외종합금융	1,348.65	1,365.31	1,410.56	1,349.90	1,177.69
한국의환은행	172.92	167.76	155.85	176.75	205.05

72) 1990년 현재 1인당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CPI)로 디플레이트(deflate)시켰음. 한외종합금융과 한국의환은행은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사용하였음. 동부화학의 1986~89년간 1인당 매출액은 동부석유화학과 영남화학의 1인당 매출액의 평균으로 계산함.

<부록 표 2> 총 자본 추이

(단위 : 백만원)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한국 비료	39,888	41,852	46,258	50,599	67,352	72,933	76,271	80,110	79,429	132,955
대한 중석	31,597	31,073	32,108	33,766	35,910	36,963	40,968	47,759	53,435	275,877
종합 기술	2,371	2,447	2,439	2,535	2,961	2,944	3,088	3,215	2,237	3,580
이동 통신	-	-	16,825	42,652	86,602	127,094	210,754	284,871	410,959	709,325
동부 화학	19,507	24,963	28,869	49,319	58,278	71,167	67,208	65,188	65,570	57,128
LG 금속	21,241	38,923	57,027	65,481	72,078	37,035	40,477	115,002	124,153	164,184
한외 중금 외환 은행	-	-	43,990	69,300	75,472	83,973	94,995	112,420	170,326	193,851
	-	-	-	739,785	768,804	1,082,205	1,133,491	1,566,061	1,640,153	2,010,543

<부록 표 3> 1인당 인건비

(단위 : 천원)⁷³⁾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한국비료	573	663	795	1,022	1,136	1,355	1,639	1,806	1,785	1,932
대한중석	428	484	548	665	687	847	921	1,220	1,378	1,573
종합기술	670	758	1,079	1,186	1,241	1,341	1,492	1,649	1,940	2,368
이동통신	-	-	-	1,087	1,248	1,335	1,389	1,607	1,934	2,318
동부화학	861	933	1,252	1,243	1,075	1,276	1,364	1,491	1,461	2,118
LG금속	535	637	764	870	1,000	1,206	1,340	1,454	1,661	1,826
한외중금 외환은행	-	-	-	1,657	1,771	2,280	2,632	2,589	3,132	3,347
	-	-	-	-	-	-	-	1,799	2,047	2,360

73) 동부화학의 1986, 1987, 1988년 인건비는 동부석유화학과 영남화학의 평균값임.

<부록 표 4> 자본비용(차입금 평균이자율)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한국비료	12.88	12.66	10.36	9.62	12.35	11.70	11.73	8.91	6.92	9.53
대한중석	10.21	11.09	11.31	11.73	11.73	12.01	11.27	11.10	9.71	10.83
종합기술	9.74	13.78	9.67	11.09	13.09	13.97	15.31	14.27	15.46	15.37
이동통신	-	-	-	-	-	-	-	-	2.94	10.12
동부화학	12.19	21.94	23.54	14.60	13.62	9.63	11.11	15.10	15.60	12.75
LG금속	10.98	11.57	10.17	14.37	11.03	11.54	10.13	8.84	8.51	8.79
한외중금	-	-	-	-	-	-	-	-	-	-
외환은행	-	-	-	-	-	-	-	-	-	-

주 : 동부화학의 1986~88년 인건비는 동부석유화학과 영남화학의 평균값임.

<부록 표 5> 종업원 현황 (1994년 완전, 부분 민영화)

기업명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한국비료	임원	8	8	8	8	8	8	8	11	14
	사무직	321	321	311	201	188	182	166	144	196
	생산직	347	347	352	461	463	482	488	494	470
	합계	676	676	671	670	659	672	662	684*	677
대한중석	임원	9	8	8	8	8	8	6	9	13
	사무직	276	276	257	230	227	240	251	200	188
	생산직	1,664	1,643	1,607	1,312	1,217	1,247	663	715	767
	합계	1,949	1,965	1,972	1,879*	1,722*	1,504*	973*	934*	983*
한국종합 기술개발 공사	임원	6	6	7	6	6	6	8	7	6
	사무직							54	50	51
	생산직	730	710	610	702	734	760	666	619	605
	합계	736	716	617	709	740	766	737*	682*	668*
한국이동 통신	임원	1	1	4	4	6	6	9	14	18
	사무직				211	353	497	681	1,672	2,205
	생산직	72	192	300	241	327	568	704	-	-
	합계	73	193	300	508*	786*	1,216*	1,609*	1,995*	2,223
동부화학 (주)	임원	9	11	7	8	11	11	11	8	12
	사무직	75	83	102	118	196	196	154	185	231
	생산직	149	161	194	229	463	514	535	463	423
	합계	233	255	303	355	670	721	700	676*	677*

☞ <부록 표 5> 계속

기업명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LG금속	임원	10	14	10	15	12	17	10	14	11	15
	사무직	391	456	534	349	396	353	314	491	487	522
	생산직	986	1,041	1,041	1,395	1,311	1,253	1,148	732	684	714
	합계	1,387	1,511	1,585	1,759	1,772*	1,671*	1,472	1,277*	1,215*	1,288*
한외종합 금융(주)	임원	7	7	6	4	6	6	6	11	11	11
	사무직				98	102	104	110	111	118	133
	생산직	97	106	106	10	8	7	7	-	-	-
	합계	104	113	112	112	116	117*	123	128*	129	144
한국의환 은행	임원	11	14	15	15	14	15	14	15	15	15
	사무직						7,810	7,779	8,142	8,348	8,449
	생산직	8,000	7,871	7,812	8,154	8,154	-	-	-	-	-
	합계	8,011	7,885	7,827	8,169	8,168	8,431*	8,411*	8,157	8,363	8,464

주 : *기타직 포함

동부화학의 1986, 1987, 1988년 고용현황은 동부석유화학의 자료임.

1. 한국비료(삼성정밀화학)

	'91		'92		'93		'94		'95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사무직	182	1,429	166	1,645	144	1,758	168	1,868	261	1,991
기술직	134	1,453	131	1,801	532	1,781	498	1,757	494	1,901
생산직	348	1,219	357	1,518	-	-	-	-	-	-
소계	664	1,324	654	1,607	676	1,776	666	1,785	754	1,935
총계	672	1,355	662	1,639	684	1,806	666	1,785	769	1,932

	'86		'87		'88		'89		'90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사무직	204	607	198	662	186	808	201	1,083	188	1,194
기술직	110	707	116	766	117	689	108	959	119	1,245
생산직	347	511	347	597	352	788	353		344	1,019
합계	661	573	661	646	655	776	662	997	651	1,111
총계	661	573	668	663	663	795	670	1,022	659	1,136

2. 대한중석

	'91		'92		'93		'94		'95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사무직	240	889	251	981	200	1,224	188	1,405	313	1,541
기술직	274	950	178	1,040	-	-	-	-	-	-
생산직	973	803	485	873	715	1,223	767	1,384	695	1,602
합계	1,487	844	914	935	915	1,223	955	1,388	1,008	1,583
총계	1,584	847	973	921	925	1,220	970	1,378	1,032	1,573

	'86		'87		'88		'89		'90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사무직	221	520	249	557	249	622	230	748	227	757
기술직	246	550	296	586	315	647	306	775	313	789
생산직	904	475	1,026	501	1,031	562	1,006	675	904	690
합계	1,371	496	1,571	526	1,595	588	1,542	706	1,444	722
총계	1,940	428	1,965	484	1,964	548	1,879	665	1,722	687

3.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91		'92		'93		'94		'95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사무직	-	-	-	-	-	-	-	-	-	-
기술직	-	-	-	-	-	-	-	-	-	-
생산직	-	-	-	-	-	-	-	-	-	-
합계	-	-	-	-	-	-	-	-	-	-
총계	766	1,341	737	1,492	682	1,649	668	1,940	694	2,368

	'86		'87		'88		'89		'90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사무직	-	-	-	-	-	-	-	-	-	-
기술직	-	-	-	-	-	-	-	-	-	-
생산직	-	-	-	-	-	-	-	-	-	-
합계	-	-	-	-	-	-	-	-	-	-
총계	736	670	716	758	617	1,079	709	1,186	740	1,241

4. 한국이동통신

	'91		'92		'93		'94		'95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사무직	497	1,383	681	1,448	1,672	1,730	2,205	2,021	2,988	2,318
기술직	553	1,430	694	1,498	-	-	-	-	-	-
생산직	15	1,079	10	1,108	-	-	-	-	-	-
합계	1,065	1,403	1,385	1,471	1,672	1,730	2,205	2,021	2,988	2,318
총계	1,216	1,335	1,609	1,389	1,981	1,607	2,305	1,934	2,988	2,318

	'86		'87		'88		'89		'90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사무직	-	-	-	-	-	-	211	1,116	353	1,312
기술직	-	-	-	-	-	-	225	1,149	311	1,348
생산직	-	-	-	-	-	-	16	906	16	846
합계	-	-	-	-	-	-	452	1,125	680	1,318
총계	-	-	-	-	-	-	508	1,087	876	1,248

5. 동부화학

	'91		'92		'93		'94		'95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사무직	196	1,049	154	1,250	185	1,666	231	1,425	281	1,925
기술직	110	1,362	85	1,504	53	1,849	-	-	-	-
생산직	404	1,308	450	1,312	410	1,399	423	1,581	388	2,277
합계	710	1,245	689	1,322	648	1,512	654	1,526	669	2,129
총계	721	1,276	700	1,364	668	1,491	670	1,461	689	2,118

	'86		'87		'88		'89		'90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사무직	-	-	-	-	102	909	118	1,106	196	1,023
기술직	-	-	-	-	40	1,331	73	1,365	110	1,351
생산직	-	-	-	-	154	790	156	1,185	353	950
합계	-	-	-	-	296	904	347	1,196	659	1,039
총계	-	-	-	-	303	950	355	1,243	670	1,075

6. LG금속											
	'91		'92		'93		'94		'95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사무직	353	1,109	314	1,245	491	1,395	487	1,652	522	1,862	
기술직	259	1,339	231	1,441	-	-	-	-	-	-	
생산직	994	1,162	917	1,301	732	1,514	684	1,673	714	1,821	
합계	1,606	1,179	1,462	1,311	1,223	1,466	1,171	1,664	1,236	1,838	
총계	1,671	1,206	1,472	1,340	1,263	1,454	1,204	1,661	1,288	1,826	

	'86		'87		'88		'89		'90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사무직	242	670	287	665	322	706	349	869	396	960
기술직	139	679	171	767	204	980	236	1,090	239	1,178
생산직	986	482	1,041	582	1,041	719	1,113	791	1,072	946
합계	1,367	535	1,499	619	1,567	750	1,698	849	1,707	982
총계	1,367	535	1,509	637	1,575	764	1,759	870	1,772	1,000

7. 한외종합금융											
	'91		'92		'93		'94		'95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사무직	104	2,121	108	2,472	111	2,405	118	3,132	133	3,347	
기술직	7	1,694	6	2,353	6	2,353	-	-	-	-	
생산직	-	-	-	-	-	-	-	-	-	-	
합계	111	2,094	114	2,466	117	2,402	118	3,132	133	3,347	
총계	117	2,280	120	2,632	122	2,589	129	3,132	144	3,347	

	'86		'87		'88		'89		'90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인원	월평균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수	급여
사무직	-	-	-	-	-	-	98	1531	102	1550
기술직	-	-	-	-	-	-	10	1320	8	1799
생산직	-	-	-	-	-	-	-	-	-	-
합계	-	-	-	-	-	-	108	1511	110	1568
총계	-	-	-	-	-	-	112	1,657	116	1,771

8. 한국외환은행										
	'91		'92		'93		'94		'95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인원 수	월평균 급여
사무직	-	-	-	-	7,585	1,807	7,805	2,055	7,942	2,358
기술직	-	-	-	-	140	1,370	-	-	-	-
생산직	-	-	-	-	-	-	-	-	-	-
합계	-	-	-	-	7,725	1,799	7,805	2,055	7,942	2,358
총계	-	-	-	-	8,142	1,799	8,348	2,047	8,464	2,360

< 참고문헌 >

- 강신일, 『공기업을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8.
- 김대환, 「민영화와 노동문제(1) : 공기업을 민영화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1호, 1996, pp. 1 ~ 24.
- 김성구, 「한국통신 민영화론의 쟁점 : PCS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시민의 통신 만들기 공청회 토론문』, 1996.
- 김우영·최영섭,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한국에서 존재하는가?」, 『노동경제 논집』, 제19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6, pp. 29 ~ 52.
- 김재홍, 「민영화의 주변논쟁」, 『규제완화』, 여름호,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994, pp. 4 ~ 18.
- 박영범·이상덕,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0.
- 산업노동연구원, 『노동관례대계(고용·징계)』, 1996.
- 송대회,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추진실적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94.
- _____,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89.
- 송대회·송명희, 「국민주방식 공기업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개발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1992. pp. 3 ~ 27.
- 이종훈, 「공공부문의 임금 및 근로조건」, 『1996년도 한국노동경제학회춘계정책토론회집』, 한국노동경제학회, pp. 1 ~ 31.
- 임응기, 「공기업을 민영화와 재벌참여 문제」, 『공기업을 민영화와 기업구조에 관한 연구』 발췌논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3.
- 임휘철, 「한국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향과 전망』, 겨울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5.
- 최종원, 「공기업민영화의 정책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94. pp. 119 ~ 48.

- 하상목, 『공공부문에서의 경쟁체제 도입방안』, KIPA 연구보고서 95-02, 한국행정연구원, 1995.
- Bamber, G. and E. Snape (이태현외 역), “영국의 노사관계”, *국제비교노사관계*, KLI, 1993, pp. 28 ~ 59.
- Boycko, M., A. Shleifer and R. Vishny, “A Theory of Privatisation”, *The Economic Journal*, March 1996, pp. 309 ~ 19.
- Buchanan, J., *Cost and Choice : An Inquiry in Economic Theory*, Markham, Chicago, Ill., 1969.
- Coase, R.,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 1960, pp. 1 ~ 44.
- Colling, T.. and A. Ferner, “Privatisation and Marketization”, In *Industrial Relations* Edited by P. Edwards, 1995, pp. 491 ~ 513.
- Disney, R., A. Gosling and S. Machin, “What Has Happened to Union Recognition in Britain”, *Economica*, Vol. 63, 1996, pp. 1 ~ 18.
- Donahue, J., *The Privatisation Process*, New York : Basic Books, 1989.
- Douglas, R.,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Economy” In *Privatisation in Asia, Europe and Latin America*, OECD, 1996, pp. 23 ~ 28.
- Durand, P., “Privatisation in France” In *Privatisation in Asia, Europe and Latin America*, OECD, 1996, pp. 95 ~ 106.
- Feldman, A., *Welfare Economics and Social Choice Theory*, 6th Edition, Kluwer Nijhoff Publishing, 1988.
- Freeman, R., “Unionism and the Dispersion of Wag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34, 1980, pp. 3 ~ 23.
- H.M. Treasury, “Privatisation in the United Kingdom” In *Privatisation in Asia, Europe and Latin America*, OECD, 1996, pp. 29 ~ 40.
- Hemming, R. and A. Mansoor, *Privatisation and Public Enterprises*, IMF Occasional Paper 56, IMF, 1988.

- ILO, *Social and Labour Bulletin*, Vol. 1, 1990, pp. 45 ~ 46.
- ILO, "Privatisation,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World Labour Report*, 1995, pp. 55 ~ 67.
- Johnson, C.,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Edited by Frederic Deyo,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Kikeri, S., J. Nellis and M. Shirley, *Privatisation : The Lessons of Experience*, Washington, D.C., World Bank, 1992.
- Kim, B., "Korea's privatisation experience" In *Privatisation in Asia, Europe and Latin America*, OECD, 1996, pp. 107 ~ 114.
- Mueller, D., *Public Cho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Nestor, S. and M. Nigon, "Privatisation in Europe, Asia and Latin America : what lessons can be drawn?" In *Privatisation in Asia, Europe and Latin America*, OECD, 1996, pp. 9 ~ 19.
- Pitelis, C. and T. Clarke, "Introduction :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sation", In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sation* Edited by Clarke and Pitelis, Chapter 1, 1993.
- Posner, R.,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I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Vol. 5, 1974.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1.
- Robinson, C., "The Results of UK Electricity Privatisation", Working Paper, University of Surrey, Guildford, U.K., 1992.
- Shumpeter, J.,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34.
-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France*, United Kingdom, 1995.

- Vining, A. and A. Boardman, "Ownership vs. Competition : efficiency in public enterprise", *Public Choice*, Vol. 73, 1992, pp. 205 ~ 39.
- Walsh, K., *Public Services and Market Mechanisms : Competition, Contracting and the New Public Management*, Public Policy and Politics Series, Macmillan, 1995.
- Willig, R.D., "Public versus Regulated Private Enterprise", *Proceedings of the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World Bank, 1993, pp. 155 ~ 70.
- Wolf, C. Jr., *Markets or Governments :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2nd Edition, The MIT Press, 1994.

[저자 약력]

• 주요약력

-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 캐나다 Lakehead University 경제학 석사
-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박사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 현 공주대학교 교수

• 주요저서 및 논문

- Wages, Hours, Earnings and Employment under Unionism,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5.
-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한국에서 존재하는가? (공저), 노동경제논집, 한국노동경제학회, 1996.
- 공공부문 단체협약 국제비교 : 한국전력, 캐나다 Ontario전력, B.C.전력 및 동경전력을 대상으로(공저), 산업관계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1996년 12월 27일 인쇄

1997년 1월 1일 발행

발행인 朴 仁 相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代) 02-782 -3884

등 록 81. 8. 21 (13-31호)

인 쇄 (주)우정미디어
(代) 02-324 -9762
